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

북·중 군사동맹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김준섭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

북·중 군사동맹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배경 및 성격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리 단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김준섭

金俊燮의 國際地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년 2월



주 심 사회학박사 이중희



위 원 문학박사 김창경



위 원 정치학박사 리 단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6
제2장 북·중 군사동맹 관계의 배경과 결성	7
제1절 군사동맹의 이론적 고찰	7
1. 동맹의 개념	7
2. 협력의 개념	9
3. 군사동맹	11
제2절 북·중 군사동맹의 형성 배경	15
1. 지정학적 요인	15
2.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	18
제3절 북·중 군사동맹의 결성	23
1. 북·중 동맹의 체결	23
2.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주요내용	27
3. 북·중 동맹의 특징 및 기능	30
제3장 북·중 군사동맹 관계의 변화 실태	32
제1절 북·중 동맹관계의 변화 요인	33
제2절 1980년대 이후 북·중 군사동맹의 조정과 변화	36
제3절 북한 핵 위기 이후 변화	40

제4장 북·중 군사동맹의 성격과 평가	49
제1절 북한의 대 중국 군사동맹 정책	49
1. 북한의 군사정책	49
2. 북한의 대 중국 군사협력	55
제2절 중국의 대 북한 군사동맹 정책	59
1. 중국의 군사정책	59
2. 중국의 대 북한 군사협력	66
제3절 북·중 동맹관계의 지속 요인 평가	69
1. 지정학적 중요성	69
2.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71
3. 중국의 ‘책임대국’ 전략의 필요	72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전망	75
■ 참고문헌	79

- 표 목 차 -

〈표-1〉 중국의 대북 무기수출 현황(1950~1983).....	26
〈표-2〉 조·중 및 조·소 동맹조약 비교.....	29
〈표-3〉 김정일 정권 등장이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현황...38	
〈표-4〉 중국 군사대표단 방북 현황(1980~2008).....	43
〈표-5〉 북한 군사대표단 방중 현황(1980~2008).....	46
〈표-6〉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정책 목표.....	49
〈표-7〉 북한의 군사정책 체계.....	50
〈표-8〉 북한 군사정책의 주요 실천 방향.....	53
〈표-9〉 김정일 정권 등장이후 북한의 국교수립 현황.....	54
〈표-10〉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 추이.....	58
〈표-11〉 중국의 국방정책 전략구상 8단계.....	60
〈표-12〉 중국 지도자별 군사전략.....	64

The Change and the Prospect of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Joon-Seob Kim

**Department of Chines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ix-decadal blood alliance of North Korea and China is now in its biggest crisis. The alliance based on China's huge sacrifice of its military force in the Korean War has been rapidly turning for the worse since the secon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built symbiotic relations through the China's Civil War and the Korean War, and since then most leaders of China, such as Zhou En-lai, Deng Xiao-ping, Zhao Zi-yang, Jiang Ze-min and Hu Jin-tao, visited North Korea, showing off their intimacy to the rest of the world.

However, in 2007, a year after the first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there was even a rumor that Kim Jung-Il said 'I can't trust China any more' to Choi Jin-Su, a North Korean ambassador to China back then, after the UN unanimously passed the resolution o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specially now, North Korea and China are in a head-on collision, each chasing its own strategic interests.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will naturally provoke discussions on the nuclear sovereignty in Japan and South Korea, which might threaten China's state of the nuclear power in North East Asia. North East Asia in insecure states due to nuclear problems is also not a desirable condition for

China's economic growth. However, it's not easy for North Korea to stop nuclear experiments and its future nuclear strategies,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its most important task, its third-generation transmission by heredity.

China, with its state as the nuclear power in North East Asia being threatened by its neighbors, is inevitably taking the second look at its North Korea policy, while North Korea might not easily give up its nuclear which is its last means of safeguarding its regime. North Korea and China have maintained their alliance for up to 60 years now, yet it has recently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and they are going to occur even more rapid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lliance of North Korea and China, especially its military side, and predict its future.

Key words : the military cooperation of North Korea and China, military alliances of North Korea, military alliances of China, the alliance of China and North Kore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혈맹’으로 출발했던 북·중 군사동맹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 그리고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 영향으로 심한 물밑 갈등을 겪어 왔다. 당시 경제 성장에 몰두한 중국은 1991년 5월 북한이 반대하던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방침을 정했고, 1992년 한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북·중 동맹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전략을 구체화 했다. 북한은 이때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라는 비난도 했지만 1996년 중국이 북한과 식량 무상원조 문서에 조인하면서 냉각기는 조금씩 사라졌고, 중국의 대북 에너지·식량 무상지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으로 ‘완화’ 양상으로 보였던 북·중 동맹관계는 재차 위기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제멋대로(悍然)’라는 강한 표현으로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북한 위기행동을 강력히 비난을 하였다. 2007년 북한은 해외공관장 회의 때 김정일 위원장이 최진수 주중북한대사에게 ‘중국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았다. 이렇게 핵실험 강행이후 양국 군사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 양국관계는 중국의 북한에게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와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으로 고립을 타개하려는 북한의 노력으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 군사동맹관계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및 핵 위기 사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등과 같이 세계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들은 향후 북·중 군사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중 군사동맹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동북아정세 내지는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 형성과 변화 실태를 토대로 양국 동맹관계의 성격을 분석과 함께 향후 동맹관계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북·중 군사동맹관계에 관한 연구는 북·중관계의 기타 영역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한·미 군사동맹, 북·중 군사동맹관계를 볼 때 학문적 연구가치가 높음에도 예상외로 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원인으로는 북·중 군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료의 접근 제한성이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과의 정치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대부분 민감한 사안들로 다루고 있어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접근의 어려움이 많고, 북한 역시 정치·군사적인 문제들은 국가기밀로 규정하여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고 객관적인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깊이 있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학자들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북·중관계가 과거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통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북·중 군사동맹관계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현실주의’ 시각으로 양국관계의 긴밀화가 이념적 외교를 토대로 한 ‘혈맹관계’로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둘째는 양국관계가 국제관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북·중 동맹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한·중 수교와 핵문제가 북·중 동맹관계가 냉각된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양국관계의 변화 시기나 특성은 다를 수 있다.¹⁾

특히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은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방, 1990년대 한·중 수교와 21세기 북한 핵문제 등으로 북·중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상동맹(Virtual alliance)’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²⁾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중 동맹관계는 수차례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2003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선언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다칭(大慶)에서 단동을 경유하여 북한의 평북 피현군 백마

1) 최영일, 「북·중 동맹관계와 군사협력관계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12)

2) Andrew Scobell, "China and Korea : THE Limits of Influence," p.277. 재인용

노동자구에 위치한 원유저장시설까지 이르는 유일한 송유관을 예고 없이 폐쇄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내 학자들은 북한의 붕괴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북·중 군사동맹조약을 개정하여 중국의 자동개입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³⁾ 북·중 동맹관계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비관적으로 변화하여 이들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미·중 간의 ‘빅딜(Big deal)’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의 학계에서는 북·중관계가 이미 일반적인 ‘통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재관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정치노선 차이를 불문하고, 군사동맹이 존재할 수 있는 이익구도가 있는 없는 간에 북·중 동맹관계의 틀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제2차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던 북·중관계가 최근 들어 상호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북·중 양국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제2차 핵위기 사태 이후 북·중 관계는 부분적인 갈등의 소지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북한의 핵실험 자체도 북·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

한편, 박창희 박사는 북·중 동맹관계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심화,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 증가, 북한체제의 마지막 안전장치로서 중국과의 동맹관계 유지에 대한 북한의 절박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북한과의 관계회복 필요성이 그 원동력이 되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가열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은 향후 북·중 관계를 강

3) 이러한 주장은 인민대학의 “스인홍”과 중국사회과학원의 “선지루(沈驥如)”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서진영, 『21세기 중국의외교정책』, (서울 : 폴리테이아, 2006), p.358~359. 재인용

4) 안인해, “북한 핵실험 이후 : 중국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6년 12월 1일, p.53~55. ‘빅딜(Big deal)’이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동참 및 ‘글로벌 핵테러 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나온 미중 간의 협력 시나리오로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인용

5) 김재관,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제52집, 2007. 2)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⁶⁾ 북·중 동맹관계의 균열과 회복원인에 대한 초점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정책변화 및 주변정세 변화에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수열 교수는 북·중 관계가 혈맹이라는 동맹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관계는 엄연히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라는 점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탈냉전 이후 양국관계의 흐름 원인은 양국 간에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⁷⁾과 해결방향 및 수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탈냉전 이후 북·중 동맹관계의 흐름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그 원인의 변수를 북·중 어느 한 편에서 찾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중 동맹의 가장 핵심은 만약 남·북한 간의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북·중 동맹관계가 군사동맹이라는 부분에서 자동개입 조약이 중국의 참전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관계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1994년 이후 제공되는 양은 다르지만 해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원유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12월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이후 북한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국가관계로 볼 수가 없다.⁹⁾ 또한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상정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였지만 군사적 제재에는 반대하는 등 북한에게 주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였다. 이러한 사실 역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볼 때 21세기 북·중 군사동맹 관계는 1990년대에 비해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최근의 연구들은 탈냉전 이후 북·중 동맹관계의 균열 및 회복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군사

6) 박장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 동맹관계 :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연례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2007. 12)

7) 주요 현안을 보면, 양국간 혈맹관계를 변화된 주변정세 속에서 재정립하는 문제, 북미간의 핵문제와 중국의 입장,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과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탈북자 처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에 대한 중국의 지원규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8) 오수열, “북·중 관계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동북아평화번영과 재외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학술진흥재단 지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동북아학회, 호남국제정치학회, 합동국제학술회의(2008. 12. 18~19) 발표논문, p.491~502.

9)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2, Spring 2003, p.46. 50만 톤의 유류는 북한이 필요한 양의 70~90% 2002년 12월 미국이 중유제공 중단 후에는 거의 100%에 가까움에 해당되며, 백만 톤의 밀과 쌀은 북한이 수입하는 식량의 1/3에 해당한다. 재인용.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중동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익보다는 특정 시점에서의 단편적인 사실들, 예를 들면 중국 일부학자들의 ‘즉흥성’ 발언이나 핵실험 직후 ‘격양된 중국내 분위기’ 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북·중 군사동맹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하여 특히 북·중 군사동맹관계의 향후 변화 전망을 북한과 중국 양측의 관점에서 분석 할 것이다. 북·중 군사동맹관계는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 1961년 북한과 중국은 왜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였는가? 냉전시대 북·중 군사동맹관계는 동맹국가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는가?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경제개방 정책은 북·중 군사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 환경구도 개편 상황에서의 북·중 군사동맹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며, 향후 양국의 군사동맹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북한과 중국이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역사적 배경과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북·중 양국의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도출하고, 48년간을 지속해오고 있는 군사동맹관계의 본질을 재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동맹초기의 공동이익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양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중 군사동맹관계의 미래를 전망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탈냉전 이후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으로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더욱 절박해진 반면에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중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이 북·중 동맹관계의 지속요인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북·중 동맹관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의 군사동맹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소원해진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가 1999년 이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중국의 태도를 감안하면 북·중 동맹관계는 현재에도 그 관계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¹⁰⁾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 균열과 회복의 동맹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북·중 동맹관계 중에서도 군사 분야에 주목 하였다. ① 북·중 군사동맹관계의 균열과 회복의 원인을 규명하고, ② 향후 북·중 군사동맹관계의 약화 또는 강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 하였다.

이에, 동맹관계 이론에 대한 정의는 Stephen M. Walt의 동맹이론을 이용해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2008년 발행된 중국국방백서를 통해 현재의 대북군사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다수의 북한문제 전문연구기관의 학술논문 자료와 중국 및 한국의 학계 논문,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북·중 군사동맹관계의 현황과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선행연구의 고찰, 연구방법 및 구성으로 분류하였다. 제2장은 군사동맹 개념의 이론적 검토와 북·중 군사동맹의 본질, 예컨대 북·중 군사동맹의 개념, 특징 및 기능과 주요내용, 군사동맹 형성요인에서 결성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북·중 군사동맹 관계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한 1980년대 이후의 국제적 환경과 북한의 미사일 및 핵위기 사태 발생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며, 제4장은 북·중 양국의 군사정책과 군사협력 실태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 및 전망으로 북·중 동맹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변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10) 한석희, 앞의 논문, “6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제2장 북·중 군사동맹 관계의 배경과 결성

제1절 동맹과 협력의 이론적 고찰

1. 동맹의 개념

외교정책의 여러 유형 가운데 ‘동맹관계’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힘의 균형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세력균형을 독자적인 능력으로 확보할 수 없을 때 타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적대 진영과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확보하는 것이다.¹¹⁾

한편,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관건은 개별국가들이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타협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즉, 국가 간 동맹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공통이익(common interest)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 내부에는 각 국가 간에 차별이익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공통이익은 적대진영으로부터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것인데 비해 긍정적 이익은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될 개별 국가들 간에 차별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동맹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냉전기에는 동맹관리가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탈냉전기의 다극체제하에서의 동맹의 유지와 관리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¹²⁾ 무엇보다도 체제와 이념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국제관계 형성구조는 적과 동지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으며, 타국의 행위에 의

11) 개별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네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두 국가군이 서로 패권 장악을 위해 상대국과의 동맹을 맺는 대립 형이 있다. 한미동맹·북중 동맹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개의 국가 혹은 네 개의 국가가 서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경쟁시키는 경쟁 형이 있으며, 세 번째, 세력균형자형은 주로 세 개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어느 한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강대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이다. 네 번째, 사이비동맹이라고도 하는 비스마르크 형은 여러 국가 사이에서 예상 침략국에 대해 위협받는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어 도전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한편, 위협을 받는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이 서로 예상 침략국과 동맹을 맺어 어느 국가 간에 외교를 맺었는지 모르게 하는 비밀외교가 이루어진다. 미국은 사이비동맹 관계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고 있다. 김태운, 『냉전기 북한의 대중·소 동맹·협력외교에 관한 연구』,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5), p.85~101.

12) 안성수, 「북한의 대중국 동맹관리 “비대칭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76.

해 이익 또는 손해의 주체가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동맹의 추세는 힘이 동등한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맹관리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국이 그 동맹을 탈퇴할 경우 나머지 국가 또는 국가들이 안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소위, 협상의 지렛대를 힘이 대등한 동맹국내의 모든 개별국가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힘이 동등하지 않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의 경우 약소국의 행위가 동맹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냉전기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동맹관계 조직으로써, 동맹의 주축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의 견해를 무시해도 동맹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은 나토를 근간으로 서유럽을 방어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지만, 약소국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방어 역할을 해 주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강대국과 약소국 각자의 동맹 체결 이유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강대국이 약소국과 동맹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냉전기에 나토를 설립하게 되었던 동기처럼, 동맹의 주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은 자신의 방위능력 향상 보다는 자국의 영향력이 약소국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동맹국이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을 체결한 것이다.¹⁴⁾

반면에 약소국이 동맹외교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 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동맹을 통해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적인 적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시의 경우 전투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동맹을 체결한다. 보편적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동맹의 개념은 바로 방어적인 상호 안보조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맹이 형성되게 되면 동맹국들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상호간에 대외정책의 조화를 비롯해, 군사계획의 조정 및 군비부담의 문제, 비상시에 협력문제 등을 들 수 있다.¹⁵⁾ 동맹으로 인하여 여기에서 상호 간에 정책적 조화를 이루는 문제는 양극체제하에서라기 보다 다극화된 현재의 국제 체제가

13) 냉전기의 동맹관계는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들간 힘의 결집 보다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김태운, 앞의 논문, p.86.

14) 냉전기 미국은 미국 자신들의 안보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보다는 소련의 서유럽으로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서유럽 개별국가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에 있었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김태운, 앞의 논문, p.87.

15)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 백산서당, 2002), p.30.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⁶⁾

국가 간의 동맹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정권 기반이 약한 정부의 경우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목적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국내정치적 이유로 동맹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상호간의 동맹조약이 외부 공동의 적에 대하여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정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혁명이나 반란을 진압하는 반항세력 진압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¹⁷⁾ 동맹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맹이 군사적 협조부족 및 정치적 결속부족, 상호간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실패한다. 북한과 소련간의 동맹조약이 폐기되고 새로운 우호협력조약으로 대체된 것은 이와 같은 차원의 요인들이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 했다가보다는 양국 간 체제와 이념적 동질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또한 동맹관계는 당사자들 간 달성목표가 서로 다를 때 동맹국간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동맹국들 간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이 또는 위협이 존재할 때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동맹이 형성 되지만, 그 위협이 심각하지 않다면 서로 다른 사회적, 정치적 가치의 차이로 인해 동맹은 실패하게 된다.¹⁹⁾

2. 협력의 개념

‘협력관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우호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적대국가 간에 협력외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호간이 동일한 목표를 목적으로 공유한 가운데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경우라고

16) 김계동, 앞의 논문, p.30.

17)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 Hall, 1983), p.107.

18) 북한과 구소련은 1961년에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나 탈냉전과 함께 1991년 소련의 해체, 러시아의 민주화 등의 이유로 인해 양국 간의 동맹관계 지속이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김태운, 앞의 논문, p89.

19) 대표적인 예는 2차 대전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동맹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서 이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4년 연합군이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소련은 연합군들이 독일로 하여금 소련을 패망시키게 한 후 독일과 연합군이 종전협상을 할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이고, 결국 2차 대전이 끝나면 전시동맹체제는 와해되고 본격적인 대결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김태운, 앞의 논문, p89.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대국 간의 협력외교는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적 상황이 확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묵시적 협력이 그 대표적인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즉, 제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진영의 지도자들은 상호가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배적 인식을 묵시적으로 공유했던 것이다.²⁰⁾ 이는 한마디로 명목상의 협력이었던 것이다.

한편, 적대국간에 명목상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전쟁을 통한 갈등해결이 상호 간에게 너무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데 있어, 특히 전쟁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관계에 있는 적대국간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대국가 간은 불안정한 평화를 공존시키는 가운데 체제경쟁을 계속하게 된다. 우호국간 협력외교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면, 냉전체제하에서의 국가들 간 군사적 우호관계는 대체적으로 동맹 또는 준 동맹으로 발전했다. 특히 냉전기 우호국간 협력외교는 당사국간에 동일한 경제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협력외교 성립에 있어서 주요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냉전기에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하의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협력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호국 간의 협력관계는 일방적으로 또는 쌍방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즉 이는 일방이 쌍방이 적응하고 가치를 나누어 갖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협조적 관계는 형성 되며, 쌍방이 협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외교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이 협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겨우는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조적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가는 상대국가에 대해 많은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게 된다.²¹⁾

협력외교 관계가 협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호간 물질적·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력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국가 간의 이해를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다는 절대적 의미는 아니다. 다만, 국가 간에 상부상조하고 이해를 균점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서로 우호협조적

20) 김태운, 앞의 논문, p90.

21)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 서유럽 및 다른 국가들과 반공-반소를 위해 협조적 관계를 희망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 동맹 등의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동맹국 등에 많은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 했다. 김태운, 앞의 논문, p90.

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두 국가는 공동의 외교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목표의 추구 방법 또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²²⁾ 협력적 동맹관계가 일단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위기상황이 지나면 약소국은 협력적 동맹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강대국은 자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보호적 동맹관계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동맹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또한 적으로부터도 특정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동맹관계는 끝이 나고 상호 간은 제휴관계로 바뀌게 된다.

한편, 협력외교는 국가 간의 지정학적 요건과 같은 자연적 요인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상대국은 협력외교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²³⁾

3. 군사동맹

위와 같은 원인으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안전보장능력을 배가시키고, 외부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지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대외적 안보환경을 만드는데, 이러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바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인 것이다.²⁴⁾ 일반적으로 군사동맹은 둘 이상의 자주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이다. 이것은 자국의 생존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의 적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예방하거나, 무력공격을 저지하려는 둘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안보협력을 위한 협약’을 말한다.²⁵⁾ 군사동맹 형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방위조약(defence treaty)’이다.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적대국에게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동맹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조약의 예로 ‘조·중

22) K. J. Holsti, op cit, p.154~155.

23) 19세기 영국이 벨기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협조적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벨기에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또한 미일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신을 아-태지역 국가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영우, 『현대외교론』, (서울 : 평민사, 1998), p.187.

24) 리 사, 앞의 논문, p.7.

25) Stephen M. Walt, The of Alliance,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12.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 ‘북대서양조약(NATO)’를 들을 수 있다.²⁶⁾

둘째는 ‘중립조약(neutrality pact)’이다. 이는 중립조약 또는 불가침조약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조약은 서명국들 중 어느 한쪽이 제 3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경우, 서명국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동맹관계이다. 그 예로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이 있으며, 현재 북한은 미국에게 이러한 조약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는 ‘협상(entente)’이 있다. 협상은 어떤 사안에 있어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 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서명국들이 공조체제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해 서로 협의할 것을 동의하는 관계이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체결한 ‘삼국동맹(The Triple Alliance)’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러시아와 1894년에 체결한 프·러 협상, 1904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영·프 협상 등이 그 예이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동맹유형의 차이점은 서명국들이 전쟁이나 위기상황 발생 시 자국의 군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독자성 또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냐는 것이다. 자율성 측면에서 ‘방위조약’이 가장 낮고, ‘협상’이 가장 높다. 중립조약은 자율성, 독자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방위조약과 협상의 중간이라고 하겠다. 방위조약의 경우는 서명국을 도와 반드시 참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나 협상의 경우는 서명국들 간에 대책을 논의하여 동맹의 형태를 방위조약이나 중립조약으로 승격시킬 수도 있고, 동맹관계를 청산할 수도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방위조약의 경우 구속력이 강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큰 반면 협상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다. 지속성의 문제 이외에 공약이행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립조약이나 협상 뿐 아니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방위조약도 있다. 평화 상태에서는 잘 지켜질지 몰라도 서명국들 중 일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서명국들이 공약이행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 간의 동맹관리가 필요하고 위기 시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증대된다.²⁷⁾ 이러한 군사동맹 성격의 방위조약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북·중 군사동맹관계는 일제 식민지시대 중국 공산당과 공동항일(共同抗日)을 전선을 펴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계속되어져 일제 패망 직

26) 리 사, 앞의 논문, p.7.

27) 김우상, 『신한국 책략』, (서울 : 나남출판, 1999), p.32~37.

후부터 1949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북한은 중국공산당을 적극 지원했다. 북한은 항일시기의 공동투쟁의 경험과 이데올로기적 공통성, 그들과 적대적인 국민당이 만주를 장악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지정학적 부담, 중국 혁명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 공산당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당시 북한으로 지원 요청을 하러온 중공군 간부에게 ‘중국의 사정은 곧 우리의 사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공에 성원을 보냈다.

당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원은 한국전에서 중국의 참전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오쩌둥은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내린 명령서에 ‘중국 동지는 반드시 조선의 사정을 자기 사정처럼 간주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²⁸⁾ 당시에 연변과 만주지역의 조선족들도 중공 측에 참여 했는데, 만주지방에서 중공 측으로 참전한 조선족은 모두 62,942명이었으며, 이는 조선족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숫자였다.²⁹⁾ 이들의 지원은 중공의 승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족 부대들은 후에 북한으로 들어와 군대와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9년 3월 18일 체결된 조·중 상호방위협정은 북한과 중국의 정식외교관계 수립인 1949년 10월 6일보다 무려 7개월여 정도가 앞선 상태에서 체결된 상호방위협정이므로 ‘비밀군사협정’인 것이다.³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화 되지 않은 ‘비밀동맹협정’이고, 소련이 주체하고 중국의 국가수립 이전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체결 당시는 그 효력과 기능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나,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의 사회주의가 변화 된지 60여년이나 지난 지금은 그 의미가 유명무실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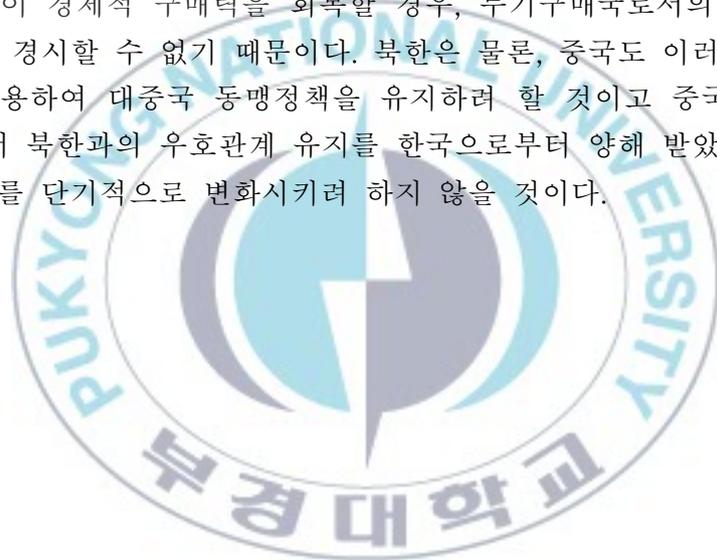
이에 반해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은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 맺고 있지 않는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이 당시 중공 대표인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였다. 이 조약은 지금까지 북한이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중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과도 잠재된 갈등관계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 관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중·소간의 분쟁관계도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과 반비례적으로 냉전시대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던 전략적 가치는 매우 약화되었다.

28)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서울, 중심, 2001), p.52. 재인용.

29) 이종석, 앞의 논문, p.45.

30) 최창윤, 앞의 논문, p.54.

그러나 중국은 탈냉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유로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첫째, 물론 북·중간 체제의 실질적 이질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과 가장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안정이 자국 안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둘째, 미국 중심의 단일적 세계 체제 확립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핵문제에 의한 북·미간의 갈등에 대북한 영향력을 대미외교에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군사력이나 한국과의 군비경쟁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첨단무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북한이 경제적 구매력을 회복할 경우, 무기구매국로서의 커다란 시장으로 북한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도 이러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활용하여 대중국 동맹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중국 또한 한·중 수교과정에서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한국으로부터 양해 받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단기적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제2절 북·중 군사동맹의 형성 배경

1. 지정학적 요인

중국과 북한은 예로부터 안보전략 방면에 밀접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순치'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당나라 때도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하였다. 16세기말 일본의 침략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중국의 명나라의 군사원조를 통해서 일본을 격퇴하였다. 또한 17세기 러시아가 중국의 청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조선은 두 차례 출병하여 청나라를 원하였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와 청나라는 중국과 조선의 안정과 동북변경의 안전을 유지하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패망하고, 이어 조선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³¹⁾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동북아까지 확대된 동·서 진영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동·서 냉전의 격화로 인해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중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즉 3자 상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과 협력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³²⁾ 무엇보다도 동북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3국간의 직간접적인 군사안보 동맹 구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소련과의 상호 군사안보 동맹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1945년 일제 폐망 이후 광복을 찾았던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된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쪽에는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된다. 같은 해인 9월 9일에는 38선 북쪽에 사회주의를 기조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된다. 그리고 다음해인 1949년에는 중국이 두개의 정권으로 분열된다. 장제쓰(蔣介石)의 국민당이 집권하는 '중화민국'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공산당이 집권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후 당시 한·중 4개정권은 서로 1개국만을 선택한 교류를 진행한다. 대만은 한국과, 중국은 북한만을 한반도 내 유일한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 이후 중국과 북한은 냉전체제의 산물인 '북방삼각관계'의 틀 안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는다.³³⁾ 당시 북한은 중국에 있어 두 가지의 중

31) 楊昭全, 『中朝關係史論文集』, (世界知識出版社, 1988), p.4~99.

32) 김재철, "북-중간 외교관계", 『통일 환경론』, (서울: 오름, 1996), p.175~176.

33) 김한규, 『한-중관계사 2』, (대우학술총서논저), p.990.

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냉전체제 하에서 이념체제의 연대감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리적 중요성이다. 한반도는 중국에 있어서 해양세력을 막아주는 완충역할을 한다. 중국은 이를 가리켜, 북한이 중국이라는 ‘이빨을 시리지 않게 할 입술’이라는 의미에서 ‘순치(脣齒)관계’라고 칭하였다. 이는 북한의 존재가 중국과 미국의 직접 대치를 막아주는 것을 의미한다.³⁴⁾

중국과 북한 간의 강력한 군사적 협력관계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의 기치를 내걸고,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25일 한국전쟁에 전격 참전하였다. 북한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에 대해서 조·중 양국 간 역사적으로 맺어진 우호친선의 도리 관계와 자기 조국의 방위를 튼튼히 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 특히 극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 후 인류사회가 새로이 형성된 고상한 국제주의의 명백한 표현이다’라고 하였다.³⁵⁾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가리켜 ‘항미원조운동(抗美援朝運動)’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항미’는 미국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침략하려 한다는 중국의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원조’는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도 드러낸다. 중국은 당시 한국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1951년 6월,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1951년도 당시 중국의 참전비용과 군수비용이 약 80억 달러에 달하였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³⁶⁾ 중국이 이와 같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을 파견한 배경적 요인은 북한의 적극적 간청과 소련의 권고가 결합³⁷⁾하여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대만과의 내전문제로 북한과 같은 분단국토의 재통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은 8년 동안 4명의 사령원이 교체되었다. 우선 한국전쟁 참전시기부터 1950년 10월 펑더화이(彭德懷)³⁸⁾가, 다음으로 1954년 9월 덩화

34) 김유남, 『두 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학영사 1999), p.290.

35) 김일성, 『우리의 정의의 공동 투쟁은 승리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참전 2주년에 대하여』, 『근로자』, 1952 10호, p.10.

36) 김유남, 앞의 논문, p.995. 재인용.

37) 이완번,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참전결정과정』, 박두복(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p.246.

38) 당시 펑더화이는 신의주로 입북하여 김일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박헌영을 먼저 만나고 그 뒤에 김일성을 만나게 된다. 당시 중국군의 지원 병력은 우선 1차로 12개의 보병사단, 3개 포병사단 20만 명에 달했으며, 24개 사단을 대기시켰다가 2, 3차로 조선에 들어가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반면에 북한의 병력은 보병 2개 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이었음을 볼 때 중국의 원조는 북한에게 생명을 연장 시켜주

(鄧華)³⁹가 지원군 사령 겸 정치위원을 맡았다. 그 후 1954년 11월에는 양더즈(楊得誌)가 사령원에 취임하고, 1955년 4월 29일부터 양용(楊勇)⁴⁰이 담당하여 이후 철군작업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정전직후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후 복구사업 이었다. 그리하여 1954년 6월 25일 평양시 보고대회에서 양용은 정전 후 중국인민지원군 전체 지휘원·전투원들은 조국 인민의 촉탁을 받들어 모두가 한 결 같이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왔으며, 조선인민들이 지나간 한국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속히 치유하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결속적으로 방조하여 왔으며, 우리 전사들은 영웅의 도시 평양시를 비롯하여 기타 지구들의 재건 사업에 직접 참가하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⁴¹ 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북한의 재건을 위한 지속적인 군사지원을 실시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전투 참여는 물론, 북한에서 자급자족했으며 전방지대에서는 북한 인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⁴² 또한 중국인들은 각지에서 북한으로 양곡을 보냈으며,⁴³ 중국정부는 기술자들을 직접 북한으로 파견하여 복구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⁴⁴ 한국 전쟁이후 1960년대에는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북한-중국-소련 간의 북방삼각관계의 틀이 깨지고, 중국과 소련은 각각 북한을 상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북한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립노선을 취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익을 챙긴다. 마오

는 것과 비교할 수 있었다. 이종석, 앞의 논문, p.229.

39) 陳忠龍, 1910년 4월 후난(湖南)성 출생, 1927년 중국공산당 가입, 토지혁명전쟁시기 중국 공농홍군조직간사, 연당대표, 조직과장 등을 역임, 항일전쟁시기 팔로군 정치위원 등, 제13병단 사령원, 항미원조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원 겸 정치위원 등, 1959년 쓰촨(四川)성 부성장, 1977년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부원장, 1980년 7월 3일 베이징에서 사망, “中國人民志願軍人物志”,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7), p.490.

40) 陳忠龍, 앞의 책 p98, 1913년 9월 29일생, 후난(湖南)성 출생, 1927년 4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가입, 1930년 중국 공농홍군 참가, 중국공산당 당원 가입, 토지혁명시기 홍군연대·사단 정치위원 등,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 꾸이저우(貴州)군사지역 사령원 등, 1953년 항미원조 전쟁참가, 중국인민지원군 제20병단 사령원, 지원군 부사령원, 사령원 등, 1958년 중국으로 귀국후, 베이징 군사구역 사령원, 1972년 선양(沈陽)군사지역 부사령원 등, 1983년 1월 6일 사망.

41) 《로동신문》 1954년 6월 25일.

42) 박길용·김국후, 『김일성 외교비사』, (중앙일보사, 1994), p. 43.

43) 《로동신문》 1954년 6월 17일. 형제적 중국으로부터 금년 1월부터 매일같이 수 십 차량씩 양곡이 입혀지고 있다.

44) 《로동신문》 1954년 5월 24일. 중국의 기술자들은 평양복구사업에 참여하여, 만경대 학원, 김책공대, 대동교 복구 등을 마쳤다.

쩌둥(毛澤東)시기의 중국은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⁴⁵⁾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 그 동안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던 이유는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과 투쟁하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명감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과, 중국과 소련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소련 측으로 기울지 못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등장과 더불어 개혁개방 실용주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군사·안보지원 정책에도 대외관계에서 이념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게 되고 주변정세 안정유지에 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국은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중요시 하며, 동서화해체제를 구축해간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국교를 수교하고,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또한 1985년에는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에게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군사·안보 위주의 전략적 외교를 지향 할 필요 없이 없어진다. 그리하여 중국은 북한에게도 개방을 유도한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비난하고 폐쇄적 자급자족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적화통일이라는 불변의 민족해방주의를 고수한 채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군비증강에 역점을 두고 상반된 이념의 독자노선을 홀로이 견게 된다.

2.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

가. 내부 요인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중국과 소련을 배후세력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초 및 목표가 기본바탕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대외정책에 있어서 진영론적 관점의 견지와 북한정권이 추구했던 국가목표 등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중국과의 군사동맹과 협력외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첫째, 지리적 인접성을 포함하여 이념적 동질성과 문화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은 대내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동맹·협력외교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반혁

45) 한국에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북한 자체의 전쟁준비를 강화한 후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폭력혁명’ 또는 ‘무력에 의한 전쟁’으로 한반도를 북한 체제 식으로 통일 하는 것.

명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식한 것이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영론적 관점을 견지하였다. 즉, 국제무대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민주진영'으로 구별하며, 후자에 편입되었다.⁴⁶⁾ 제국주의 진영을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국제민주진영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갈등⁴⁷⁾이 일게 되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그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⁴⁸⁾

다른 한편의 대외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국가목표와 일치하는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현존 북한체제유지·발전과 한반도 공산화를 통한 전 세계의 공산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표는 '조선 및 세계혁명'과 '민족 및 계급해방'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대외정책 기본노선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자주노선'으로써,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세계의 국제관계를 침략, 정복, 약탈 등의 상호 투쟁관계로 인식했으며, 이에 반해 공산주의 세계는 '상호존중과 형제적 협조'의 관계로 간주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서로 도울 것을 주장하였다.⁴⁹⁾ 이와 함께 '3대혁명역량강화' 노선은 북한의 대외정책 집행과정에서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북한은 이를 '혁명과 해방'⁵⁰⁾이라는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포함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한 대외경제교류의 증대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정치적 종속을 가져올 수

46) 김태운, 『냉전기 북한의 대중·소 동맹 협력외교에 관한 연구』,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5)

47)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갈등은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 등에 따른 중소분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권의 분열,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의 발생 등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8) 허문영, “북한의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편,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9.

49) 김일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1952. 4. 25)”,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630.

50) 3대혁명의 정의는 1970년대 제5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무화혁명의 3가지 혁명을 뜻한다.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에도 북한에서는 노동이나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이 이를 생활의 기본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3대 혁명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본질에 있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3대혁명은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사회내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공산주의가 건설될 때까지 기본혁명의 과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http://www.nkchosun.com/glossary/glossary.html>

도 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의 기본노선이 되었다.⁵¹⁾ 북한의 대중동맹·협력외교 촉진제의 보조적 요소는 군사 안보적 요인과는 달리 경제적 요인을 인식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인 1966년에서 1975년까지의 기간은 북·중간 무역량은 25%에서 35.4%로 증가했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중·소 분쟁이 시작되는 시기로써 북한이 중국 쪽에 편향된 활동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나. 대외 요인

북한의 대중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대외요인의 배경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부터 중국, 소련과 지리적 인접성과 이념적 유대를 비롯한 문화적 또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소련과 중국과 동맹·협력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련과의 동맹·협력 문제를 배제하고 중국과의 동맹·협력 분야만을 살펴본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60여 년간 지리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일의대수(一依帶水)⁵²⁾의 관계와 정치·경제·군사적으로는 순치(唇齒), 혈맹(血盟)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불가분리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을 들 수 있다. 즉, 북·중 양국은 시대적 상황과 안밖의 정세변화에 따라 때론 반목·질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제휴하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던 것이다.⁵³⁾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러 양국의 동맹·협력외교를 촉진시키는 주요 기제가 되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양국 간 동맹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양국 간의 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붕괴 일보직전의 북한을 구원해준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혈맹관계로 맺어지게 되

51)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은 외부를 통하기보다는 자기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갖는 것을 말한다.

52) 이 의미는 옷의 띠만큼 좁은 강이라는 뜻으로, 강폭이 좁음을 비유한 말이다.

53) 냉전기 북한과 중국간 관계부침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소 분쟁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특히 1960년대의 북·중 관계는 중·소 분쟁과 연계되면서 밀착과 소원한 관계를 반복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중·소 분쟁이 표면화 되지 않았던 1950년대 말까지는 표면상 소련공산당의 노선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2000), p 218~219.

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전쟁의 위기상황에서 참전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감수하며 자국을 도와주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사와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피로써 맺어진 관계로 굳어지게 되었다. 셋째, 동북아까지 확대된 동서진영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서 냉전의 격화로 인해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중국과 소련 두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⁵⁴⁾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즉, 3자국 상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과 협력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 3국간의 직·간접적인 군사안보 동맹 구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소련과의 상호 군사안보 동맹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항일(抗日)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혈연적 동맹관계’로 인식하는 데는 앞의 지정학적 작용 이외에 항일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적 동질성에 기인한다. 그러한 연유로 항일시기와 국공내전(國共內戰)기에 맺은 인연은 북·중 군사동맹의 한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⁵⁵⁾ 중국은 필요에 따라 무장 세력의 일부를 한인공산주의자들로부터 충당해 왔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중국 연안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공산당원으로 활약하던 소위 ‘연안파’라고 불리는 ‘독립동맹’이었다.⁵⁶⁾ 이러한 독립동맹은 1945년 9월경에는 6,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만주주재 중국인민해방군 사령관이었던 린뱌오(林彪)에 의하면, 1945년 말경 자신의 휘하 야전군 부대로 대규모의 한인 병사들이 충원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집권하기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무장원조를 받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의용군이다. 1938년 10월 중국 무한(武漢)에서 발족한 조선의용대는 동 시기에 건립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이 부대는 당시 중국공산당 정치부 소속이었으며 김원봉이 대장 직책을 수행 했으며, 총97명으로 편성된 2개의 부대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는 훗날 조직개편을 통해서大本부와 3개 지대로 확장되었고 1939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54) 김재철, “북한-중국간 외교관계”, 윤전석 편, 『통일환경론』, (서울 : 오름, 1996). p.175-176.

55) 김일성은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중국어를 배운 것이 ‘조선혁명’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52.

56) 독립동맹은 마오쩌둥 휘하의 한인 공산주의자 동맹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김두봉, 최창익, 무정, 김창만, 윤공흠 등을 수 있다. 이들은 북한입국과정에서 마오쩌둥의 군사적 원조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순, 『북한 오십년사』, (서울 : 지문각, 1961), p.61~65; 이상근,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p.108~109.

중국공산당 점령지역인 화북지방으로 북상했다.⁵⁷⁾ 1941년 6월 조선의용대는 화북지대로 개편되어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군사조직이 되었다. 1942년 5월 광복군과의 통합을 선언하고 7월에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이들은 중국의 동북과 화북에서 적극적인 항일 투쟁으로 중국공산당을 지원해 왔다. 이와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에서 항일 게릴라 출신의 많은 한인들은 당시 중국공산당 부대에 충원되어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을 지원해 왔다. 1943년 3월 18일에 중국과 북한은 '상호군사방어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동북과 관내에 있는 한인부대를 1949년 7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북한 측에 보내었다. 1950년 북한군의 지상병력은 13만 명이었는데 그 중 1/3은 중국군으로서 국민당과의 전투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한인 병력 이었다.⁵⁸⁾

이러한 몇 가지 주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상호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을 시작하였고, 전략적 협력은 차후 한국전을 치르면서 군사적 동맹형태로 발전한다. 북·중 동맹 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동일한 이념과 역사적 경험 및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의 종합작용으로, 1961년 7월 11일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동맹관계를 이루었다. 사실상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지닌 이 조약은 체결 된지 4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장전(章典)으로 자리 잡고 있다.⁵⁹⁾

57) 조선의용군의 제 1부대는 43명의 조선민족혁명당원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박효삼이 대장을 맡았다. 제 2부대는 1920년 조선공산당 간부 출신인 최창익이 지도한 조선청년전위동맹 출신 4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익성이 대장을 맡았다.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서울 : 화평사, 1991), p.238.

58) 시모토마이 노부오, 이혁재 역,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서울 : 기과량, 2006), p.53~90.

59) 김태운, 『냉전기 북한의 대중·소 동맹 협력외교에 관한 연구』,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5), p.85.

제3절 북·중 군사동맹의 결성

1. 북·중 동맹의 체결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형성은 항일투쟁과 한국전쟁의 동일한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욱 실질적인 원인은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⁶⁰⁾ 중국은 북한보다 늦게 정부를 수립하였고, 국공 내전 이후 나타나는 산적한 문제해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1950년 김일성의 계획 아래 소련이 적극 지원하기로 하여 발발한 한국전쟁까지도 중국은 묵인한 정도의 입장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만해도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관계는 쌍무적 직접관계가 아니고 소련을 축으로 하는 소련·중국·북한이라는 북방 3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협력을 실질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부터이다. 중·소 관계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북·중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59년 9월 26일자 ‘인민일보’에 중국 건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북·중 관계의 유대를 주제로 한 논문을 기고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강화되어 갔다. 이 해 9월 28일 김일성은 중국정권 수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 등과 회담을 했다. 소련에서는 후루시초프가 참석하였는데 그는 중·인 국경분쟁 문제를 두고 인도 측을 두둔하며 중국 측과 쟁론을 벌였다.⁶¹⁾ 중·소 간의 갈등이 점차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에 들어서부터였다. 1960년 4월 중국공산당 기관지 ‘홍기’는 논설을 통해 평화공존론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성은 남아 있다며 소련의 ‘수정주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때 소련에 대한 비판은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간접적인 비판의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중

60) 조승순, 『중·소 분쟁과 북한』, “아세아연구 제30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61) 중·소 분쟁의 직접적 원인은 후루시초프의 “평화공존노선”의 주장과 스탈린 격하운동 및 개인숭배 비판의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개인숭배의 비판은 중국 내에서 모택동과 절대적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고, 북한의 김일성 또한 이러한 개인숭배 비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박치정, 『중국-북한 관계변화의 양상』, “중국연구” 제 23권,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4), p.25.

국과 소련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논쟁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각각 동유럽국가인 유고와 알바니아에 대한 비판형식으로 공격하였지만 점차 상대방을 향한 공격으로 발전해 갔다.⁶²⁾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중국은 북한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했으며, 김일성도 더욱 분명하게 중국 쪽 입장을 두둔하기 시작했다.⁶³⁾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사상을 높이 들고 북한을 구원해준 것이 북한을 중국으로 기울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북한이 소련과 대립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소련에 대부분 의존해왔던 경제원조의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소련은 북한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북지원을 줄였다. 김일성은 그 대안으로 중국에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 당시 중국의 경제력은 매우 낙후한 상태였으며,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국내 생산력이 점점 쇠락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중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잡아두기 위해 적지 않은 경제 원조를 단행했다.⁶⁴⁾ 이후 군사적 지원을 지속할 여유가 없었던 중국은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을 북한지역에 지속적으로 주둔시키면서 영향력을 가질 뿐이었다. 1956년 제20차 세계공산대회를 통한 스탈린 격하운동과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으로 시작된 중·소 갈등과 함께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군사지원과 경제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1958년 북한에 주둔한 중국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약화를 보강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61년 7월 중국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김일성은 직접 1961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방위조약에 마오쩌둥의 서명을 받아 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도 소련의 기술과 경제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당시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지원이 여의치 못하였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약하였다. 당시 북한은 국제환경으로 말미암아 군사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게 하였다. 북한은 1965년부터 자주국방 강

62) 이기택, 『국제정치사』, (서울 : 일신사, 2000), P.507.

6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2000), P.218.

64) 북한은 중·소 분쟁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조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양구간의 분쟁을 이용하여 소련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아내고자 했는데, 소련 역시 중·소 분쟁이 표면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김일성 정권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대북원조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몇 개의 기술이전 협정의 체결과 기존의 7억 6천만 루블의 차관에 대한 상환 면제, 1억 4천만 루블에 대한 상환연장 등 소련과의 관계악화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경제·군사적 실리를 챙겨놓았다.

화를 위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소련의 지지와 군사적 실리를 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이념적 협력은 유지하면서 중국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비화하지 되지 않게 노력 하였다. 실리적 면에서는 관계유지를 중시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본래 반미·반제투쟁을 유지한 관계 때문에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적대화로의 진행을 원하지 않았다. 1968년 이후 북한은 소련의 지원 아래 구축된 군사적 위력을 남한에 대해 무모하게 사용하면서 소련의 굳은 지원 의지를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련의 대북한 정책이 점차 식어지자 중국은 이 틈을 이용,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화하여 양국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가 재개되기 시작한다.

중국 대표인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970년 문화혁명 이후 최초의 방문 국가로 북한을 설정하고 1971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폭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결단을 보였다. 이어서 1978년 5월 5일 화국봉 총리와 1978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의 덩샤오핑 부총리의 친선 방북이 이루어지는 등,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1970년 이전 양국 간에 있었던 보잘 것 없던 군사교류와 군사원조가 활발해 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 주요 국가로 명실상부 자리매김 하였다. 1970년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중간에 관계개선이 설정되고 중국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화국봉 체제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발전되고, 이에 힘입어 군사지원이 적극화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대미 접촉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1970년 이전 양국 간 조약유지 차원에서만 이어져 오던 형식적인 군사교류가 이후부터 <표-1> 에서 보듯이 북한이 중국의 군사원조 주요국가로 자리매김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중국의 대북한 무기수출 현황(1950~1983)

분 야	수출시기	무기명칭	무기종목	수 량	중국명칭
항 공 기	1958~1959	F-4	전투기	100	MIG-15
	1957	AN-2	수송기	4	
	1958	F-4	잔투기	80	
	1958~1959	IL28U IL-28 YAK-18	훈련기 폭격기 훈련기	4 20 20	
	1958~1960	B-5	전투기	300	MIG-17
	1959~1960	B-6	전투기	20	MIG-19
	1978	BT-6	훈련기	10	
	1982	F-6	전투기	10	MIG-19
	1988~1989	F-6	전투기	5	MIG-19
합 정	1957~1960	상해급 이하	근해소해정	24	면허생산
	1967	상해급	초계정	4	
	1968	유두급	초계정	4	
	1968	P-6급	고속어뢰정	3	
	1970	상해-1급	초계정	11	
	1972	상해-2급	초계정	8	
	?	Swaton급	초계정	8	
	1973~1976	Romeo급	잠수함	7	
	1975~1978	남해급	구잠정	6	
	1979	남해급	구잠정	4	
	1982	황봉급	고속유도탄정	4	
미 사 일	1977~1989	해응-2	함대함미사일	156	면허생산
지 상 무 기	1950~1954	?	야포	수천	면허생산
	1960	130mm 야포	야포	30	
	1970	80mm 야포	야포	20	
	1974	T-59, 69	전차	15	
	1977	531형 APC	장갑차	15	
	1979~1980	T-69	전차	10	
분야미상	1982~1983	로켓트/미사일	?	?	기술/원료 제공

출처 : 최영일, 「북-중 동맹관계와 군사협력관계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57.
재구성

2.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주요내용

1961년 7월 11일 중국과 북한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전통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 후견인 역할과 또한, 군사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하는 명분과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61년 7월 6일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중국과도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은 동북삼각동맹 국가 결성이후 중국과 소련의 이념분쟁이 싹트기 시작하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 깊이가 심화되자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화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중국과 소련이 완전히 결별하기 이전에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당 대에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군사동맹 결성을 추진했다.

첫째, 1차 남침 적화통일 전쟁인 한국전쟁의 실패 이후, 2차 남침을 위한 지원세력의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둘째, 남한의 반공정부 수립이후 1953년에 남한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합법적으로 장기 주둔함에 따라, 김일성은 북한의 체제위협을 지원해줄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진 외부세력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상호공동방위라는 목적의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조·중 우호조약의 핵심 내용은 군사동맹이라는 것이다. 조약 제2조의 조문에 뚜렷하게 명기된 내용인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니며,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체결 상대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지원조를 제공한다.’ 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전쟁개입이 주요 골자인 군사동맹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조약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체결 양국의 수정 및 폐기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이 무기한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항의 종료기한이 없도록 하고 있다. 조약 제3조에서는 ‘체약 쌍방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현재까지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 동맹국으로써의 혈맹관계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친선 결속관계의 담보로 여겨지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중국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대내적 목표 변화에 따른 경제 발전에 큰 의미를 두고 한·중 수교를 전격 체결한다. 중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펼친 대 남·북한 정경분리 정책을

표명 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중국에게 있어 냉전체제 당시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의미는 상실하였다. 하지만 쌍방 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형식상 존속시켜주는 조약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군인사교류, 군사장비, 물자, 무기획득 등을 지속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군사동맹의 연결 관계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서문에는 ‘국가의 영토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상호원조 및 지지’라는 저우언라이(周恩來)의 5개 원칙을 기초로 ‘양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건의 한다’라고 조약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조약 제2조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안보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히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대칭 동맹관계’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한·미·일 동맹에 의한 어떠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에 틀림없다. 이에 조약을 체결한 지 3개월 후인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 4차 대회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북한은 대중 동맹조약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선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⁵⁾ 물론 여러 환경의 변화로 조약이행에 대한 가능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짐’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동맹 차원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⁶⁶⁾ 또한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시간적인 면에서 대응조치의 즉시 대응이 라는 점이 특별하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1개 국가 또는 다수 국가들의 연합으로써 무력공격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처하게

65) 김일성, 『김일성선집 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194.

66) 탈냉전 이후 중국의 대내외 환경의 변인해 조약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들로부터의 침공으로 전쟁에 처하게 되면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조항은 냉전기에 북한의 위협상황 시 중국의 자동개입을 보장 했지만 현재의 중국 학계와 정계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이고 있다.

되는 경우, 타방 즉 체약국은 지체 없이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특정의 국가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는 다르다.

이 조약은 세계대전의 근원인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고도의 경계심을 강조한다. 따라서 서방세계의 연합군을 가상적으로 상대하고 있다.⁶⁷⁾ 조약의 효력을 살펴보면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는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후 5년마다 재협의를 통해 연장해야 하는 소련과 체결한 조·소 조약과는 명확한 대조를 보이는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조약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중 조약은 강력성, 종합지원가능성, 즉응성, 이념성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표-2> 조·소 및 조·중 동맹조약의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표-2> 조·소 및 조·중 동맹조약의 비교

구 분	조·소 조약(1961년 7월 6일)	조·중 조약(1961년 7월 11일)
유효기간	10년	무기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했을 경우 타방은 즉시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 제공 ◦ 쌍방은 상대방이 대하는 행동 및 동맹에 불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중 일방에 대한 제3의 국가로부터 침략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함 ◦ 쌍방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음
조약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이 기한만료 1년 전에 폐기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5년간 효력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지속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9월 폐기 ◦ 2000년 2월 신 조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현재 조약 유지

출처 : 안성수, 「북한의 대중국 동맹관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7), p.36. 재인용.

67) 조용진,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북한 동맹정책』, 『국제문제논총』, 제7권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995), p.100.

3. 북·중 동맹의 특징 및 기능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국 본토의 제 1선이라는 완충지대와 방어선의 개념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를 지속하였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는 무력의 사용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중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게 여겨왔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에게 중국은 강력한 후견 국가로 세계화에서 받는 고립과 국제사회의 외교압력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이데올로기적 노선과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에서 북·중 군사동맹은 출발하게 된다. 중국과 북한의 최초의 군사동맹은 중국의 국가수립 이전인 1949년 3월 18일 북경공산당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북경에서 체결한 ‘조·중 상호방위협정’⁶⁸⁾이다. 이 협정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⁶⁹⁾

첫째, 양측은 그 어떤 성질의 침략에 대해서도 공동방어를 한다. 어떠한 제국주의 세력이든 북한 또는 중국의 일방을 공격하는 경우 양국은 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전쟁에 있어 공동행동을 취한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194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국의 동북에서 무기 및 병력을 북한에 제공한다. 셋째, 북한은 만주에 있는 일본 기술자 및 고용원, 일본군수품 사용에 관한 최우선권한을 가진다. 넷째, 북한과 중국공산당은 양측의 경제적 필요에 의거 물물교환을 한다.

이러한 협정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1949년 10월 6일 중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⁷⁰⁾ 이전에 이미 1차적인 비밀군사동맹인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협정내용을 토대로 동맹성격의 주요사항은 1949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화인민군 소속의 한인부대를 북한에 파견한다는 사실과 다른 국가가 북한을 침공 시 중국과 공동으로 방어한다는 것이다. 첫째, 동맹조약의 핵심기능인 양국의 안보이익 보장이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조약의 제2조항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쌍방의 어떠한 한 개인

68) 최창윤, “북한의 대중·중·소 정책”, 『북한외교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54.

69) 안상규, 「중국과 북한의 군사협력관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70)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2000), p.313.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들을 근거로 중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동맹조약의 체결 이후 1961년 7월 15일 중국과 북한은 중·조 연합공보를 발표하였고,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침범이든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범이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침범으로써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견결히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다.⁷¹⁾

이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자금, 기술, 물자원조를 진행하였다. 또한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북한은 조·중 동맹조약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⁷²⁾ 중국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이익이 북한체제에 존립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동북방 변경의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완충지대이다. 이러한 전략적 요인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측면의 일방적인 지원을 지속해왔다. 이는 북한 정권의 독립과 정치안정, 주변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간섭을 통제하는 것이 중국의 정치적 안전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두 번째 기능은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공조이다. 조·중 우호조약 제4조에서의 ‘양국이 국제정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상호 고위층의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라는 조항으로 그 기능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기능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의 유지이다. 동맹조약 체결이후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을 다짐하였다. 양국 간 동맹조약의 성립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대국의 영향력과 개입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시켰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환경은 동북아 열강들의 군사력이 ‘동맹’ 이라는 시점에서 영향을 받아왔다. 2차 세계대전 종식이후 동아시아의 냉전관계는 미·일 안보조약과 중·소 동맹조약을 통한 대립구조가 중심이 되어왔다. 1950년대까지는 중국과 소련의 동맹을 통해 한·미·일 동맹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왔다. 이렇듯 1970년대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까지 중·소 관계였다. 그러나 1961년 조·중 및 조·소 우호조약의 체결을 통해

71) 《人民日報》, (1961. 7. 15)

72) 『김일성 선집 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북방삼각관계 형성으로 변화하였다. 1980년 이후 중·소 분쟁이 심화되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마침내는 중·소 동맹조약이 폐지되었고, 중국의 정책변화가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근본적 중심요인으로 변화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조약은 동북아에서 냉전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냉전적 질서 아래서 동북아 세력균형체제와 한반도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반소정책이라는 본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냉전적 대립은 그 성격이 변화하지 않았고,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동맹관계의 특수한 측면의 기능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⁷³⁾

제3장 북·중 군사동맹 관계의 변화 실태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립된 북·중 동맹관계는 양국의 각기 시각의 차이로 인해 균열이나 갈등이 발생 할 수 도 있다. 국제관계에 ‘영원한 벗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원칙은 국제정치학의 제1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느 국가든지 이 적용 논리를 준용하고 있다. 물론 국익을 고려할 때 전략적 이익과 당면한 이익이 구분될 수 있으나,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원칙에 국익을 따지지 않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⁷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고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은 북·중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개혁개방 자체에 대한 충격과 한·중 수교와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정책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 등을 변화 영향에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73) 최영일, 「북-중 동맹관계와 군사협력관계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28.

74) 李 師, 「한중 수교이후 북-중 관계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제1절 북·중 동맹관계 변화요인

1. 지역 내 국가관계의 변화

북·중 동맹관계가 동맹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의 국제환경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중에도 양국관계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과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다. 탈냉전은 북·중 관계의 특징인 동맹관계의 기본요소인 이데올로기를 국제사회의 관행기준으로부터 추방시키고 대신에 경제적 실용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하도록 만들었다.⁷⁵⁾

1989년부터 시작된 소련을 포함한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냉전의 근원이었던 체제경쟁은 사라졌다. 냉전기에 초강대국과 동맹국간 일종의 위계적인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탈냉전기에는 동맹체제가 군사적·안보적 문제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보다 평등한 관계로 변화했다. 또한 개별국가의 국가 이익으로 동맹관계의 성격도 재조정되는 등 동맹체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를 겪으면 독립한 러시아에서는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 않고, 범죄활동이 빈번하고 민족 갈등이 심화하여 경제 방면도 급격히 쇠퇴하였다. 경제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대규모로 감소하여 경제난 문제가 매우 심화되었다. 러시아는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련 해체 초기에 긴축전략을 실행하였다. 국가 간의 경제적 실리와 이익이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재편되어지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진영외교가 실질적으로 사라지면서 진영 내의 공동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안보협력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⁷⁶⁾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혈맹관계로 발전했고, 중·소 분쟁 상황에서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중·소 분쟁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중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없게 하였다.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유럽국가와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전략에서 안보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서 국내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국내에 집중하여

75) 이종석, 앞의 논문, p.288.

76) 허문영,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통합연구』, 제18집, 1호, 2005, p.25.

국제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 4월 미국의 부시정부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구조의 전망’⁷⁷⁾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앞으로 미국이 10년 내에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주 동아시아지역의 미군을 감소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클린턴 정부 등장 이후 폐기되었지만 클린턴 정부는 대화와 접촉의 ‘연착륙(軟着陸)’ 대북 정책을 실행하여 동북아 정세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990년대에 남·북한은 최종적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군사적 압력은 감소하였다. 동시에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안보는 개선되었으나, 북·중 양국에 대한 서로의 의존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새로운 국제 질서 구도 아래서 북·중 동맹관계는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2. 이데올로기의 변화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조정에 대하여 중국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중 간의 인식 차이는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처방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중국의 이론가들은 동구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동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너무나 빠른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지면서 경제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중국 이론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동구 국가들이 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 하는 것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식의 행정명령식의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몰락의 원인을 찾았다. 사회주의 몰락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분석은 그 대안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 경공업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며, 100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⁷⁸⁾ 그리고 당의 ‘령도’가 보장되는 적극적이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생산단위의 창의적 발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경

77) 허문영, 앞의 논문, p.26.

78) 이종석, 앞의 논문, p.312.

제구조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북한은 중국의 시간과는 반대로 여전히 민족 경제의 필요성을 고수하고 그 논리를 토대로 중공업 우선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⁷⁹⁾ 1980년대 초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82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령이 지난날 경제적·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연적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원용하여 ‘합영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부분적으로 실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심화와 더불어 실리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1992년 한·중 수교를 맺게 되자,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변화 하였다. 1987년 중국공산당 제 13차 당 대회에서 중국은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제기하면서부터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한다.⁸⁰⁾ 특히 1999년 6월 1일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사설에서는 비사회주의 요소의 도입을 적극 배격하였다.⁸¹⁾ 김정일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는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계기로 다시 변화하게 되었다. 우선 김영남은 중국 방문에서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중국의 당과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북한이 견지해 온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태도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2000년 5월 베이징 방문 시 개혁개방에 대한 태도에 본격적인 변화를 보였다. 김정일은 중국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일은 상하이의 푸둥지구 방문시 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김정일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들이 부정해 왔던 비사회주의요소를 도입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노선의 지지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2001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새로운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강조한다. 이는 개혁개방문제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으로부터의 돌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79) 이종석, 앞의 논문, p.296.

80) 中國共產黨歷次全國代表大會, <http://cpc.people.com.cn/>

81) 《로동신문》, 《근로자》, 1999년 6월 1일

볼 수 있다. 2001년 1월 9일 로동신문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도 생활기풍도 근본적으로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⁸²⁾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3월 김정일은 중국의 쩡칭홍 중국공산당 조직부장 평양 방문간 접견시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고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배우겠다.’⁸³⁾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사회의 이러한 신사고는 중국사회에서 개혁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존의 이념과 인식체계의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긍정과 부정, 또다시 긍정으로의 반복을 순환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제2절 1980년대 이후 북·중 군사동맹의 조정과 변화

1980년대에 들어서 북·중간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는데 특히 중국이 MIG-21의 개량기인 A-5전투기 20대(당시 연간 생산 40대)를 북한에 과격적으로 지원한다.⁸⁴⁾ 1983년에는 다량의 MIG-21기를 중국으로부터 인도 받았으며, 이에 보답으로 북한은 중국에 청진항의 사용권과 백두산 천지의 상당 지역을 중국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8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김일성의 조·소 비밀회담(주로 경제·군사문제 협의)은 다시 북한의 대소편향을 가져왔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하였으며, 중국군 수뇌급인사의 교류를 통한 정치적 결속을 기반으로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등 정기적인 북·중 군사교류 활동을 통해 쌍방관계의 불변성을 확고히 하였다. 결국 1980년대 북한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친선 및 체제수호를 위한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과 관계설정을 발전시키면서 비교적 안정된 북방 3각 관계를 유지하였다. 1990년대 북한은 소련의 붕괴이후 탄생한 러시아와 군사 및 정치·경제면에서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중국만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는 유일한 북한의 우방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개방을 전환함으로써 북한과의 상당한 괴리성을 형성하게 되고, 19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면서 북·중

82)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83) 《인민일보》, 2001년 3월 22일

84) 《내외통신》, 제356호, 1983년 11월 4일

관계가 냉각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중 수교과정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유지를 한국으로부터 양해를 받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중 동맹관계는 이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긴밀하게 유지되었다.

1992년 9월 이후부터 1994년까지 중국과 북한 군사대표단의 상호방문활동에서 북·중 군부 지도자간의 접촉과 교류는 한·중 수교 이전보다 오히려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은 한·중수교가 있던 1992년 이례적으로 3개의 군사대표단과 5개의 우호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와 한·중 수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⁸⁵⁾ 이 처럼 중국과 북한의 군지도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한·중 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적 측면 이외에 양국 지도부의 전통적 유대관계에 크게 기인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원로들은 1930년대 초 이래 항일전쟁과 1950년대 초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경험으로 인하여 심정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1931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군의 지휘아래 항일 유격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⁸⁶⁾ 덩샤오핑(鄧小平), 펑 전(彭眞), 양상쿤(楊尙昆), 홍슈웨즈(洪學智) 등 중국 공산당 원로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중국군 최고 지도자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었다는 사실도 중·북한 군사지도자간의 접촉과 교류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과 북한에서도 제도보다는 인적요소에 의해서 주요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국 군지도부 간 유대관계는 군사적 우호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과 북한 지도부는 양국 간 군사동맹조약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한·중 수교 직후 우젠민(吳建民)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북간에 서명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첸치천(錢基琛) 외교부장도 한·중수교로 인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외에 공표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지도부가 ‘새 친구를 사귀면서 옛 친구를 잃지 않는다.(結植新朋友, 不忘老朋友)’고 누차 언급한 것도 중·북한 간의 지속협력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⁷⁾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제13차 중국 전국대표대

85)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 1945~2000』, (도서출판 중심, 2001) p.280.

86) 楊昭全, 韓俊光, 「中朝關係簡史」,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p.384~408 ; 《人民日報》 1950. 7. 19

87) 《文匯報》, 1992. 8. 25

회에 축전을 보내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바,⁸⁸⁾ 북·중간의 군사동맹 조약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중국이 당면한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주의의 수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포기할 수 없는 국정목표 이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통치 체제의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체제로서 북한 정권 존재가 필요하므로 김정일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 때문에 중국은 비록 북한의 개인숭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는 있으나, 김정일 체제를 승인하고 지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표-3>의 기간 중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현황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3>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현황

항목 \ 년도	1998	1999	2000	2001	비고
품 명	식량 10만톤 원유 8만톤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	식량 4만톤	식량 20만톤 디젤유 3만톤	
금 액	3,204.7만불	4,836.4만불	2,756.4만불	6,912.9만불	

출처 : KOTRA 「북한뉴스레이터」 (<http://www.korea.or.kr/main/trade/nk/letter/select.jsp>),
중국해관전산통계(1998~2001)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는 중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개념으로 다양한 외교목표의 상위개념으로 그 핵심은 ‘북한체제의 안정’에 있다.⁸⁹⁾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은 내부안정의 확신이 부족한 중국의 안보환경에 불리한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체제의 몰락은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지도부에 동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체제의 붕괴 위험은 오히려 핵 위기의 위협보다 더욱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20억 달러의 원조비용을 감당하고 있다.⁹⁰⁾

이에 대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선린외교와 대국외교 그리고 남·북한 사

88)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1992. 10. 11~17), p.5.

89) 박창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중 관계의 변화”, 『사회과학논집』, 제37집, 2호, 2006, P.88.

90) 서진영,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문제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 제7집, 2호, 2003

이에서 등거리 실리외교를 추구하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남·북한 모두에 친 중국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개입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한·중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이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강대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간에 제한된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사회주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은 현재 식량의 40%, 원유의 70%를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대외경제 개방 모델을 일부분 수용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받아 국제 선진국의 과학기술 흡수와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은 2006년 1월 비공식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 푸둥지구를 시찰하였고, 또한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장쩌민 주석이 주장했던 ‘3개 대표론’⁹¹⁾을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이 중국식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방향과 특징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과거의 마오쩌둥 시대의 양대 진영론과 제국주의와의 ‘전쟁불가피론’을 폐기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다. 중국은 4개 현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이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로 지속 유지됨으로써 주변 강대국들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타파하는 것이 중국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⁹²⁾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에 주력하는 일종의 개입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개선,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북한

91) “3개 대표론”은 장쩌민 총서기가 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은 1) 선진사회 생산력의 발전방향 2) 선진문화의 발전방향 3) 광대한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한다. 이는 공산당과 자본주의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이다. 이에 대해서 이희옥, “체제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모색”, 『국제정치론집』, 제45집 1호, 2005, p.214. 참조

92) 박치정, 앞의 논문, p.30.

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북한의 개방이나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 벗어나거나,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정권에 의해 추구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조정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⁹³⁾

제3절 북한 핵위기 이후 변화

1993년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대립을 지속해왔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⁹⁴⁾ 탈퇴를 선언한 후 미국은 NPT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강온 양면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한의 핵문제 동결과 양국 간 관계개선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중 수교로 인하여 조성된 국제 고립을 타개하고 경제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사태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중국이 떠안게 되었다. 동맹 국가로서 북한을 위협할 수도 없고,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다. 자명한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지역안보에서 모든 것이 위협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코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북·중 관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북·중 관계 균열의 직접적 계기는 핵실험 이전인 2006년 4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전통적 혈맹국가로서 신뢰했던 중국의 친미적 대북정책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고, 이에 따라 북한 내부의 대중국 불만과 위기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⁹⁵⁾ 그리고 북·중 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던 가운데, 북한이 2006년 7월 5일 7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차

93)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 Peninsula :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2003, Vol.26, No.2, p.43.

94)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95) 이원봉·이시형,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정치정보연구』, 제7집, 1호, 2004.

시도하자 중국은 급기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었다. 이처럼 북·중 간에 상호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중국으로 하여금 격렬한 분노와 배신감을 만들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북 억지력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반증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핵실험 개시 2시간 전에 러시아 측에게 먼저 통보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 측에게는 20분 전에 통보함으로써 중국 측의 분노를 더욱더 고조시켰던 것이다.⁹⁶⁾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북한 핵실험은 최근 북·중 관계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몬 계기가 되었다. 2차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던 북·중 관계가 최근 들어 상호 간에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핵개발이나 핵실험은 여전히 북·중 관계의 토대를 와해시킬 만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북·중 군사동맹 관계의 중요성은 핵실험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에 있어서 핵확산의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는 경우 동북에 있어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여 중국이 핵보유국에 포위되는 최악의 상태가 나타나면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⁹⁷⁾

북한의 핵문제가 현재 단계의 북·중 동맹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핵은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항하고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경우 양국 간의 이해 충돌이 부분적으로 일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중 양국 간에는 중대한 국제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약속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⁹⁸⁾ 더욱이 2006년 7월 5일 김정일은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衛)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면담요구를 거부하였고, ‘조·중 우호조약’ 체결 45주년 기

96) 전병곤,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 『중국학 연구』, 제35집, 2006, p.262.

97) 김재관,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2007, p.289.

98) 이원봉·이시형, 앞의 논문, p.162.

념행사 차 방북한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도 무산되는 등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안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⁹⁹⁾ 이는 북·중간의 최근 60년 역사에 있어서 사상초유의 사건으로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서 북·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사일 발사 후 북·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의 일각에서는 대북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북한의 핵문제 발생 이후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조약’ 효력이 약화되고 있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과 접촉 시 및 상호원조조약이 차기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하여 발생하는 한국전에는 다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 하였다.¹⁰⁰⁾ 2차 북핵위기에서도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03년 2월 27일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미 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는가 하면 북미 간 직접대화가 불가능시 다자형태의 틀 속에서 양자 간의 대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북경에서 3차에 걸친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특별한 성과 없이 종료되었으며, 2005년 3차 북 핵 위기가 조성되고 중국은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였는데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에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명백 밝히고 있는 것이 실제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다는 것¹⁰¹⁾을 대외에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대북한 정책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중 양국의 동맹관계 간에는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정치적, 경제적, 및 특히 군사안보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1971년 군사동맹 체결이후 북한과 중국은 정기적인 군사대표단의 상호교류 활동을 유지해오고 있다. 아래의 <표-4> 와 <표-5> 의 현황을 통해서 그 성격과 규모, 회수 등에서의 미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보다 북한 체제보장에 대한

99) 김일수,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정책과학연구원』, 제26집 2호, 2006, p.55.

100)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Summer 1997), p.253, 「조선일보」, 1997. 4. 14

101) 200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세와 정책』 통권81호 : 2005, “(북한 핵보유 선언이후) 중국의 반응과 정책 전망”, 『정세와 정책』 통권105호, (경기 성남 : 세종연구소)

국가 이익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북·중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오히려 더욱 많은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4〉 중국 군사대표단 방북 현황(1980~2008)

구분	시작일	종료일	단장명	직책명	대표단명
초청 / 방문	1981. 5.12	1981. 5.26	오수권	총참모장	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1982. 6.14	1982. 6.22	경 표	국방부장	군사 대표단
	1982.10.12	1982.10.27	한선초	전중앙지원군 부사령관	전중앙지원군 대표단
	1983. 5.20	1983. 6.18	장종빈	총정치국부부장	인민해방군 가무단
	1983.10.14	1983.10.29	감위환	총정치국 부주임	인민해방군 정치일군 대표단
	1984. 6.29	1984. 7.14	강응희	북부부대 사령관	인민해방군 참전 참관단
	1984.10.23	1984. 11.3	정유산	난주군구 사령관	인민해방군 친선 대표단
	1985. 6.11	1985. 6.22	우태충	광주군구 사령관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85. 7.19	1985. 7.30	장 동	국방부 외사국장	국방부 외사국 친선참관단
	1985.10.17	1985.10.30	유진화 한덕채	정치위원지원군사단장 공군지원군 사령관	전인민지원군 대표단 전인민지원군 영웅 대표단
	1985.10.22	1985.10.31	유호진	군총정치부조직 부처장	전인민지원군유가족 대표단
	1986. 6.13	1986. 6.25	이구령	제남군구 사령관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86. 8.19	1986. 9. 3	진기위	북경군구 사령관	북경군구 사령원
	1987. 4.27	1987. 5. 9	부전유	성도군구 사령원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87. 6. 8	1987. 6.17	유건중	국방부외사국 부국장	인민해방군 일군 대표단
	1987. 8.28	1987. 9. 7	왕 해	공군 사령관	인민해방군 공군 대표단
1987.12.11	1987.12.21	유정승	심양군구 사령관	인민해방군 대표단	

구분	시작일	종료일	단장명	직책명	대표단명
초청 / 방문	1988.10.23	1988. 11.3	홍복달	심양군구 정치위원	심양군구정치위원 일행
	1989. 3.15	1989. 3.23	홍문중	국방부외사국 국장	인민해방군외사일군 대표단
	1990. 4.17	1990. 4.27	이용문	해군 정치위원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90. 8.23	1990. 8.30	진기위	국방부장	인민해방군 군사대표단
	1990.10.22	1990.10.29	전 승 장 진 허귀우 요 선	정치위원 전중국인민지원군 대리 해방군 총참모부장 북경군구 부사령관	조중 군사정전위, 인민지원군 전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전중국인민지원군열사가족 대표단 전중국인민지원군영웅대표단
	1992. 4.21	1992. 4.27	조수봉	심양군구 부참모장	인민해방군 군사대표단
	1992. 10.6	1992.10.14	하봉비	단장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대표단
	1992.10.20	1992.10.27	유리전	공군중장	전인민지원군 대표단
	1993. 7.23	1993. 7.31	유안원	정치위원	전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1993. 11.1	1993. 11.8	리문경	불상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94. 6.21	1994. 6.29	왕 극	심양군구 사령관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95. 9.20	1995. 9.27	장 공	정치위원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95.10.21	1995.10.28	사옥효	불상	전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1996. 7.10	1996. 7.14	왕계영	함대 사령원	인민해방군 해군함선(할빈호)
	1997.10.14	1997.10.22	주고닌	총수본부(중장)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97.11.18	1997.11.26	당천패	부주임	인민해방군정치일군 대표단
	1998. 8. 8	1998. 8. 8	웅광해	부총참모장	인민해방군 친선 대표단
	1998.10.16	1998.10.22	두철환	중장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1999. 6.15	1999. 6.23	갈진봉	중장	심양군구 대표단

구분	시작일	종료일	단장명	직책명	대표단명
초청 / 방문	1999. 8. 3	1999. 8.10	마 진	단장	인민해방군외사일군 대표단
	2000. 7.18	2000. 7.25	고 조	부회장	인민해방군평화군축협회 대표단
	2000.10.22	2000.10.26	지호전	상장	인민해방군 고위군사 대표단
	2001. 9.23	2001. 9.28	오옥경	중장	인민해방군 친선 참관단
	2001.10.20	2001.10.26	선무해	소장	인민해방군외사일군 대표단
	2003. 8.18	2003. 8.22	서재후	서기	인민해방군 고위군사 대표단
	2004. 6.26	2004. 6.29	리 옥	총참모장	인민해방군 국경경비 대표단
	2004.10.26	2004.10.31	정덕홍	단장	전인민지원군 노병 대표단
	2008.10.23	2008.10.28	송 곤	공군정치부 부주임	인민해방군 공군정치부 문공단

출처 : 국방부, 대외정치검색 목록(북-중 군사대표단의 교류방문 현황), 1980년~2008년



〈표-5〉 북한 군사대표단 방증 현황(1980~2008)

구분	시작일	종료일	단장명	직책명	대표단명
초정 / 방문	1980. 5.20	1980. 6.10	백학림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대표단
	1981. 5.20	1981. 6.11		.	조선인민군 협주단
	1981. 11.1	1981.11.5	강덕수	단장	조선인민군 대표단
	1982. 5.18	1982. 6. 8	박중국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82. 9.28	1982.10.15	윤치호	총정치국 부국장	조선인민군 정치일군 대표단
	1984.10.16	1984. 11.1	김광진	부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85. 6. 5	1985. 6.14	이태호	수석위원(소장)	인민군 정전위원회 대표단
	1985.11.26	1985.12.10	김봉술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86. 5.26	1986. 6. 2	박명철	체육지도위 제1부위원장	인민군 국방체육 대표단
	1986. 6.17	1986. 6.26	김일철	해군사령관(상장)	조선인민군 해군 친선 대표단
	1986.10.28	1986.11.11	조순백	제2군단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87. 8.17	1987. 8.26	오극렬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군사 대표단
	1987.10.12	1987.10.22	이병욱	상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88. 7.20	1988. 7.29	조명록	공군사령관	조선인민군 공군 대표단
	1988. 11.2	1988.11.16	허극성	중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89. 8.25	1989. 8.31	최 광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군사 대표단
	1989. 9. 7	1989. 9.12	이두익	대장	조선인민군 간부 휴양단
	1989. 11.7	1989.11.23	박기서	상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89.12.15	1989.12.19	원명균	소장	조선인민군 정치일군 대표단
	1990. 7.28	1990. 8. 1	전문섭	대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0.11.10	1990.11.17	김광진	대장	조선인민군 군사 대표단
	1993.11.11	1993.11.23	옥봉린	중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4. 6. 6	1994. 6.13	최 광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군사 대표단
	1994.10.22	1994.11. 1	오용방	평방사령관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5. 4. 4	1995. 4.14	김정각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구분	시작일	종료일	단장명	직책명	대표단명
초정 / 방문	1990. 7.28	1990. 8. 1	전문섭	대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0.11.10	1990.11.17	김광진	대장	조선인민군 군사 대표단
	1993.11.11	1993.11.23	옥봉린	중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4. 6. 6	1994. 6.13	최 광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군사 대표단
	1994.10.22	1994.11. 1	오용방	평방사령관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5. 4. 4	1995. 4.14	김정각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6. 5.28	1996. 6. 5	정창열	부부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7. 6.10	1996. 6.17	이봉죽	부총참모장(중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8. 5.26	1998. 6. 1	지영춘	단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1999. 7.13	1999. 7.20	여춘석	상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2000. 6.17	2000. 6.19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인민무력부상
	2000. 7.11	2000. 7.18	한원화	중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2000. 12.7	2000.12.12	안영기	국장	.
	2002. 10.9	2002.10.12	강표명	중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2003. 4. ?	2003. 4. ?	조명록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정치일군 대표단
	2003.11.18	2003.11.22	이태일	상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2004. 7.12	2004. 7.14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군사 대표단
	2006. 6.20	2006. 6.24	이용환	상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2008. 4.22	2008. 4.26	이병철	공군사령관(상장)	조선인민군 공군 대표단
	2008.10.18	2008.11. 1	김춘삼	상장	조선인민군 친선 참관단

출처 : 국방부, 대외정치검색 목록(북-중 군사대표단의 교류방문 현황), 1980년~2008년

2003년 4월 북한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8월에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북·중 군사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근거에 따라 군사동맹 국가인 북한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중국이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는 근거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국은 이 조항을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에 까지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표명,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중국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적대적 존재가 아니라 협력적 동반자의 존재로 변화하였고, 미국과도 잠재된 갈등관계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 관계라고 할 수 없도록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중·소간의 분쟁관계도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피로 맺어진 혈맹국으로 지칭하지 않고 전통 우호협력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중간 결속력이 시대의 상황변화에 따라 그만큼 약화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⁰²⁾

1961년 7월 11일 북·중 군사동맹관계 형성이후 4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맹 조약에 의한 실효가 발휘되고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혈맹적관계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전략적 군사협력 측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¹⁰³⁾

102) 2004년 10 6일 중·북 수교 55주년을 기념하여 후진타오와 김정일을 비롯한 양국 지도자들은 축전을 교환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양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로 지칭하였다. “中朝領導人互致賀電祝兩國建交55周年”,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026/2900122.html>>

103)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중·북간 군사동맹조약에 의거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 중국은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정책을 냉전시기의 안보개념으로 폄하 하면서 세계 어떤 나라와도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신상진, 『북·중 관계 전망 : 미·북 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p.50.

제4장 북·중 군사동맹 관계의 성격과 평가

제1절 북한의 대 중국 군사동맹 정책

1. 북한의 군사정책

세계의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이 북한의 군사정책도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북한의 중요한 국가목표 중의 하나는 북한 헌법 제 9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령도 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¹⁰⁴⁾ 는데 있다. 정책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체 무장력의 구비 및 외부 지원세력의 획득에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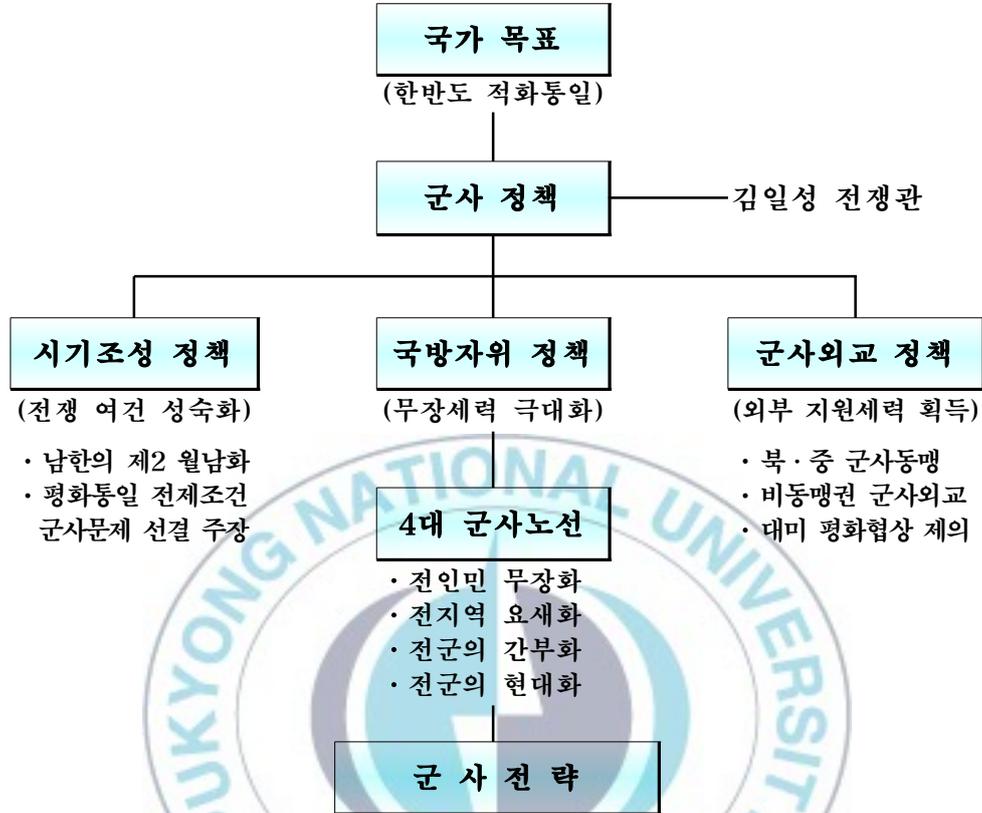
김일성의 전쟁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의 군사정책은 크게 시기조성정책, 국방에서의 자위정책, 군사외교정책 등 3대 기조로 구성된다. 시기조성정책은 전쟁 여건의 성숙을, 4대 군사노선으로 표방되는 국방자위정책은 무장력의 극대화를, 그리고 군사외교정책은 외부군사지원 세력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4대 군사 노선 정책목표를 요약하면 <표-6> 과 같다. 또한 군사정책체계를 살펴보면 <표-7> 과 같다.

<표-6>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정책 목표

군사노선	정책 목표
전군의 간부화	군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 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이상의 높은 직무수행
전군의 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
전인민의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 사상적·군사기술 적으로 무장
전국의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104) 『북한 사회주의 헌법』, (1998. 9. 5 개정), 제9조.

〈표-7〉 북한의 군사정책 체계



출처 :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서울 : 박영사, 2002)

북한의 통일정책 목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며, 그 점에 관한 한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남북대화, 남북 간의 연방제 제의 등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마치 남북 간의 사상적 상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통일목표가 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북한 정권의 군사정책은 군사력 증강정책으로 일관된 전쟁준비로서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은 군사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전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장비현대화’로 일컬어지는 4대 군사노선은 곧 북한 전 사회를 병영화하고 전 지역을 지하진지로 요새화함으로써 대외적인 군사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는 한편 적

절한 시기가 조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책의 핵심기조로써 국방자위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대외적인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시 공산권의 두 축인 중·소 간의 이념대립의 갈등 심화로 인한 북한의 부득이한 대중·소 등거리 군사 정책 표방의 필요성이 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막대한 경제·군사 원조 속에서 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밀월관계는 중·소 대립과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북한은 어느 일방에 치우칠 경우, 타방으로부터의 경제적·군사적 원조 중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중·소 분쟁의 소용돌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자위노선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어부지리의 여러 가지 이익을 얻었을 것임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1년 7월 7일과 11일 북한은 소련과 조·소 및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방위조약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양국과의 균형된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안보를 공고히 하려 했던 북한은 소련과 중국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적극적인 경제·군사 원조를 얻어낼 수 없었다. 중국은 당시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소련의 경제·기술적인 원조중단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자체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다. 더욱이 북한의 대 소련 관계는 1962년 10월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에 있어서 소련이 친인도 입장을 견지한 것과 같은 해 10월 28일 흐루시초프가 케네디 행정부의 쿠바 연안 봉쇄에 굴복한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을 계기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소련에 대한 불신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대소 비난을 가중하면서 친(親)중국적 입장을 표명하자 소련은 북한에 군사와 경제 원조의 중지 및 삭감을 단행 하였다.¹⁰⁵⁾

소련으로부터 연료, 신예무기 및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군사력 유지 및 증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일단 유사시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지원도 회의적으로 전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의 자위 노선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군사력의 유지 및 증강을 위한 강구책이었던 것이다. ‘4대 군사노선’은 바로 국방에서의 자위 실천을 위한 실천지침으로 북

105) 중·소 분쟁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지위, 『북방 3각관계-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중심으로』, p.79~115. 김 덕, “북한의 대중·소 관계 전개,” 북한연구소편, 『북한의교론』, (북한연구소, 1978), p.107~112.

한 지도부의 한국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군사전략상의 반성 위에 당시 북한의 자원동원능력 등을 토대로 제시 되었다. 김일성은 1952년 12월에 개최되었던 일명 ‘별오리’ 회의에서 전쟁수행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민병대와 같은 예비부대의 부족, 간부의 지휘능력 부족, 군장비의 낙후, 부대 간의 규율의 문제, 부대에 대한 정치공작사업의 미비 등을 꼽고 있다.¹⁰⁶⁾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62년 당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군 수뇌부는 소련의 군사지원이 삭감·중단되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의 패배 요인을 토대로 자체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사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인민무장화, 전지역의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방침이고, 추후 ‘전군의 현대화’가 추가됨으로써 4대 군사노선으로 완성된 것이다. 국방에서의 자위를 목표로 하여 4대 군사노선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정책은 휴전이후 지난 50여 년간 통일목표에 관한 한 북한은 한 치의 변화도 없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적용대상에 따라 대내·외, 대남군사 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대내·외 군사정책은 196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김일성 사망한 이후인 1998년 9월 5일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4장(국방) 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인민무장화, 전지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¹⁰⁷⁾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군사정책의 지속성이 재확인 된다.

그렇다면 김일성의 사망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의 군사정책은 어떻게 변화 하였는가? 과거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지배층은 이상의 정책 기초 아래서 마치 남한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국가를 병영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북한주민을 동원하고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체제논리는 현 김정일 체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북체제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북한이 김정일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체제를 수호하며 내부로부터의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대남군사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 하였지 약화시키거나 변화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¹⁰⁸⁾

106) ‘별오리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서울 : 동아출판사, 1994), p.822~823.

107) 『북한 사회주의 헌법』, (1998. 9. 5 개정) 제60조.

〈표-8〉 북한의 군사정책 주요 실천 방향

구 분	내 용	비 고
1960년대	- 4대 군사노선의 관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전당·전인민의 전쟁동원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와 집단안보 체제 구축 '69년 특수 8군단 창설
1970년대	- 4대 군사노선의 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적 군사공업기지를 완성, 획기적인 자위력 육성 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전술 교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향상 쏘전선에 남침용 땅굴 굴설
1980년대	- 4대 군사노선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투동원태세 완비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현대전 능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 설치 경제난으로 병력의 경제·건설현장 투입
1990년대	- 4대 군사노선의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민일치 강화 건국가적 및 전인민적 방위체제 강화 독자적 전략무기체계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증서, 군대 원호기풍 진작 자체생산 SCUD 미사일 배치,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및 플렌트 수출로 외화 획득

출처 : 통일원, 『'95 북한개요』, p.467.

가. 대내·외 군사정책

북한은 대내적으로 내부체제 공고화를 위한 강병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실천이라고 함으로써 군사적 방위 능력은 다른 영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선이라는 소국이 세계에서 높은 권위와 존엄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대내체

108) 북한은 1995년에 들어 각종 집회와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전쟁발발 및 불가피론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2주년 기념보고대회(4.9), 군 창건 63주년 중앙보고대회(4.24) 등에서 북한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한·미 양국의 대북군사압력 강화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전체 군인들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김정일을 옹호·보위하는 성쇠가 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중앙방송, 4. 17)”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적에게 천백 배의 보복을 안길 것이다(중앙방송, 5. 30)” 등 주민들에게 전쟁발발에 대비하여 결전의 정신무장을 갖추 것을 독려하고 있다. 『내외통신』, 제957호, (1995. 6. 15).

제의 안정화를 구축해 온 것이다. 김일성 사망 후 1995년 9월 7일 러시아는 조·소 동맹 조약의 효력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고, 그 후 1996년 9월 10일 조약의 효력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1999년 3월 러시아로부터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대신 ‘안보위협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 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 체결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 북한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 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하는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군사 등 쌍무적 협조발전, 주한미군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1982년 11월 리비아 카다피 원수의 평양 방문 시 ‘조선·리비아 우호협력동맹’ 을 체결하여 군사부문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군사자료·군사 전문가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을 합의 하였고, 1986년 3월 쿠바 카스트로 수상의 방북 시에도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조약’ 을 체결하였다. 2001년 5월에는 북한공군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시찰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고위 군사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산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표-9〉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국교수립 현황

연 도	국 가	연 도	국 가
1998년	◦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년	◦ 브루나이
2000년	◦ 이탈리아, 호주, 필리핀, 영국	2001년	◦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브라질, 바레인, 뉴질랜드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2002년	◦ 동티모르, 피지	.	

출처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ain/top.html>), 재인용.

북한은 중국과의 군사·외교 측면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바,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의 군사대표단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 방문토록 하고 있다.

나. 대남 군사정책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군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궁극적인 네 가지의 목표가 있다.¹⁰⁹⁾ 첫째,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원하며 유사시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한다. 둘째, 남북대화에서 군사적 측면을 지원, 군비통제회담에서 선군축을 강조하면서 대남 군사력 우위를 계속 유지한다. 셋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다. 넷째, 남한사회에서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정규군 117만 외에 동원 가능한 예비병력 748만 명을 포함한 역량의 지휘를 의미한다.

북한군은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군의 특징은 방어보다는 혁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공격작전 수행을 위한 전투서열편성, 병력통제와 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정치사상 반복교육, 과도한 지하진지 건설 및 유지 등에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 극복과 공안 통치를 위해 상당수의 군 병력을 경제건설 현장과 치안유지에 투입하고 있다.

2. 북한의 대 중국 군사협력

가. 1980년대~김일성 사망

북·중간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1980년대 들어서 급격히 확대되는데, 특히 중국이 MIG-21기 개량기인 A-5 전투기 20대(당시 중국 심양소재 전투기 생산공장의 연간 생산 40대를 북한에 파격적으로 무상지원 한다. 이후 1983년에도 다량의 MIG-21 전투기를 무상지원 받았으며, 김일성은 이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중국에 청진항의 무상 사용권과 백두산 천지의 1/3 상당 지역을 중국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4년 5월에 있었던 김일성 소련과의 비밀 회담을 통해 경제와 군사부문의 협력을 약속받으면서 다시금 소련으로 기우는 대소편향을 가져왔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군 고위인사의

109) 국방부, 『국방백서』, (2008), p.20.

교환을 통해 정치적 결속을 다지면서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등 쌍방 간의 관계의 불변성을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시기 내에 김일성은 공식·비공식으로 방문을 통해 덩샤오핑과 자오쯔양 등과의 활발한 회담을 통해서 군사·경제 향후 체제유지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구소련의 정통을 이어받은 국가로 탄생하면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비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하면서 오직 중국만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는 유일한 북한의 우방으로써 협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경제 분야는 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여 정부의 주도하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상당한 괴리감이 형성된다. 그러한 상황에도 중국은 정경분리를 선언하며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하면서부터 중국의 대북한 관계가 과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혈맹으로 뭉쳐진 군사동맹 관계에서 변모하기 시작했다. 물론 한·중 수교 시에 북한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으나, 중국은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핵개발 중지와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92년부터 2년간 연간 14억 1천 2백만 달러에 상응하는 최신무기와 군사기술을 이전 및 제공하였다.¹¹⁰⁾ 중국은 철저한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김일성 사후에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김정일의 집권 이후

1994년 9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이미 후계자로 내정되어 권력승계를 준비 중이던 김정일을 내세워 위대한 수령의 업적을 덜하지도 더하지도 말고 1백퍼센트 계승, 1백퍼센트 실현할 것¹¹¹⁾ 이라고 한데서 여전히 김일성식의 완고한 봉건적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였다. 북·중 관계에 내재된 상호 전략적 중요성을 보면 한·미·일 남방 3각 관계의 대중 압박을 완화시켜주는 존재로서의 중국에게는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에게는 동구 사회주의 해체 현상의 변집에 대한 방어막 기능으로써의 중국과의 보완적 관계에 양국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중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공으로 관계

110) 오진용, “갈림길에 선 중국·북한관계”, 『북한』 제327호(1999), p.89~89.

111) 유동렬, “98년 북한 김정일 체제의 전망”, 『월간 북한』, 통권 315호(1998), p.223~234.

의 변질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계속되는 식량난의 지원과 군사동맹의 지속유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혈맹 우선 배타 제국주의’ 정책이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한·중 지도자급의 상호 방문활동은 북한으로부터 중국을 더 이상 과거처럼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동맹관계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중국에 대해 과거처럼 완전한 동맹국으로서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냉각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불편한 북·중 관계¹¹²⁾가 다시금 복원된 것은 1997년 8월 김정일이 당 총서기에 추대되면서부터 보다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¹¹³⁾ 김정일이 총서기로 추대된 이후 중국에게 강경에서 온건한 입장으로 분위기로 전환하였고, 중국은 북한이 내민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2001년 북·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만나 정상회담을 실시함으로써 양국은 아직도 변함없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선린우호관계’에 입각 군사동맹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도아래 북한을 6자 회담에 나오게 하면서 중국은 중계자 입장이었지만, 북한 측에 편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표면적으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북한은 중국과 결별을 하고서는 체제 존립 차체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동맹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얻어내어 북한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확고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통일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노선에 대해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의 한국 편향적 밀착을 저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방 모델을 선별적으로 따르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 서방제국으로부터 선진과학기술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얻는 것을 단기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¹¹⁴⁾

112) 오진용, 앞의 논문, p.80~81.

113) 김정일은 당 총비서에 추대되기 직전인 1997. 9. 19일 강택민이 제15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된 것을 축하하는 진문을 보냈다.

114) 유석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 (서울 : 박영사, 1997), p.220-221.

〈표-10〉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 추이

기 간	내 용
북한건군~1950년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 북한과 실질적 군사적 협력 시작 ◦ 북한주둔 중국군 철수, 북한에 대한 대규모 군사지원 실시
1960년 초~1970년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중국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 주은래의 방북, 북한의 군사원조 주요국으로 자리매김 ◦ 화국봉 체제 → 등소평 체제 전환, 대북 군사지원 강화
1980년 초~김일성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과 등소평, 비밀회담 실시 상호원조조약 체결 ◦ 1987년 자오쯔양과의 회담, 군사·경제·체제유지 협력 논의 ◦ 소련 붕괴, 유일한 우방으로 중국의 협력관계 유지 ◦ 중국, 시장경제 개혁개방 정책 전환, 군사동맹 지속 유지
김정일 당 총서기 취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식의 봉건 사회주의체제 고수 ◦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방 3각의 대중압박 완충 존재 - 동구 사회주의 몰락으로부터 북한체제를 지켜주는 존재 ◦ 한·중 관계개선에 따른 냉각관계, 김정일 정권 출범으로 해소

출처 : 박진형,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 실태와 전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p.10~11. 재인용.

북한은 핵문제에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대미 핵협상에 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중 양국의 수뇌가 과거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문 제에 직면할 때 이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듯이 김정일이 또 다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농후하다.¹¹⁵⁾

그러나 북한은 탈냉전과 중국의 실용주의 대북 노선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념과 명분으로 유지해왔던 대중국 정책에서 실리를 중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과 의 동맹적 환상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대중국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115) 신상진, 『중국 신지도부의 대내외 정책전망 보고서』,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9.

제2절 중국의 대 북한 군사동맹 정책

1. 중국의 군사정책

중국의 군사전력은 그 시작과 범위를 예측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중국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와 대만 국방부에서 분석한 중국군의 군사능력 평가¹¹⁶⁾에 의해서만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대략적인 상태를 유추할 뿐이다.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의 주권, 안보, 영토의 보전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이익 보장과 인민이익 보호를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하며,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이 서로 부합하는 공고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적극 건설하며, 전면적 소강사회¹¹⁷⁾ 건설 과정에서 부국(富國)과 강군(強軍)의 통합을 실현한다.¹¹⁸⁾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단계에서 중국 국방정책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안보와 통일을 수호하고 국가의 발전이익을 보장한다. 국방과 군대 건설의 전면적 조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정보화를 주요 지표로 하는 군대의 질적 건설을 강화한다. 적극방어의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한다. 자위방어의 핵전략을 견지한다. 국가의 평화적 발전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한다. 국가안보의 요구와 경제사회 발전의 수준에 근거하여 중국은 국방과 군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¹¹⁹⁾을 시행하며,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구상의 주요 내용은 <표-11> 과 같다.

116) 대만국방부가 『중국의 對대만 군사능력』을 평가하여 입법원에 제출 하였다고 보도하였음. 《臺灣聯合報》, 2004년 8월 31일

117) 小康社會, “중국은 2002년 11월 제16차 당대회시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100주년이 되는 시기인 2020년까지 1인당 GDP 3,000불 수준의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년) 100주년이 되는 시기인 2050년까지 국가 현대화를 달성하여 부강한 민주문명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자는 중장기 국가목표를 제시하였음. 소강(小康)은 중국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으로 온포(溫飽)의 다음 단계를 말함,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뜻함.”

118) 국방정보본부, 『중국국방백서, 2008』, p.6.

119) 『중국국방백서, 2006』, “1단계 : 2010년 이전까지 건설한 기반 구축, 2단계 : 2020년 전후까지 기반 구축을 토대로 비약적인 발전 추구, 3단계 : 21세기 중엽까지 상기 전략목표를 달성하여 정보화 군대 건설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여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11〉 중국의 국방정책 전략구상 8단계

구 분	내 용
<p>국방과 군대의 정보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를 국방과 군 현대화의 발전 방향으로 삼고 국정(國情)과 군정(軍情)에 입각하여 중국 특색의 군사 변혁(中國特色軍事變革, RMA)을 적극 추진하며, 국방 및 군대건설 전략기획과 군·병과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2010년 이전에 건설한 기초를 다지고, 2020년 이전에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 정보화 건설에 있어 중대한 발전을 이룩하며, 21세기 중반에 국방과 군 현대화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p>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종합적으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 협조 발전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국가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며, 부국과 강군을 함께 고려하여 국방과 군대 발전전략이 국가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한다. ◦ 국방건설을 경제사회 발전 속에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 협조 발전하는 과학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풍부한 자원과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국방건설을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를 함께 고려하고, 군민의 상호이익을 견지하고, 평화 시기 국방자원의 사회적 이용 효과를 향상한다.
<p>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 체제·편제 및 정책·제도의 개혁을 조정하고, 군대 조직 형태의 현대화를 점차 추진하여, 2020년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군대건설 원칙에 부합하는 일련의 과학적 조직 모델과 제도 안배 및 운영방식을 구비한다. ◦ 국방과학기술공업체제와 무기장비 조달 체제의 개혁을 조정하고, 무기장비의 연구제작에 있어 자체 개발능력과 품질효과를 제고한다. ◦ 군민결합·군민복합의 무기장비 연구·생산체계, 군대 우수인력 양성체계 및 군대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집중·통일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반응이 신속하고 권위가 있으면서 효과적인 국방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도약식 발전의 길을 지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를 기초로 정보화를 주도로 삼아 기계화와 정보화의 복합 발전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 강군을 견지하고, 신기술 무기장비를 발전시키고, 인재양성 전략계획을 실시하고, 정보화 조건하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전면적인 현대화 군수를 건설하여 확실한 전투력 생성 모델로 전환한다. ◦ 중점요소를 부각시키고 우선과 차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서의 도약식 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 근검한 군대건설을 견지하고, 과학적 관리를 중시하여 제한된 국방자원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 중국이 실행하는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전략적으로 방어, 자위 및 적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야 적을 공격하여 제압하는 후발제인(後發制人)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 세계 군사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고, 국가안보 및 발전 전략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신시기에 부합하는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제정하였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국부전쟁)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전쟁 형태의 변화·발전과 국가가 직면한 주요 안보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장 복잡하고 곤란한 상화에서 방위작전 준비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착안한 것이다. ◦ 현대적 전쟁체계에 대한 대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체와 합동작전을 기본 작전형식으로 하고, 군·병과 작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며, 공방결합(攻防結合)을 견지하고, 민첩하고 기동력 있는 전략전술의 운용을 중시하며, 유리함을 취하고 불리함을 피하고,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공격한다. ◦ 합동작전 지휘체제, 합동훈련체제 및 합동지원체제를 완벽히 갖추고, 전력의 결합구조를 최적화하며, 부대편성을 완비하고,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에서의 승리에 부응하기 위한 작전전력체제 건설을 가속화 한다.

120) 중국군은 전면전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부전쟁'이란 용어를 쓴다. 이는 한국어의 국지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군은 국지전을 하나의 전쟁 형태로 정의한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것을 중국군의 군사전략 방침으로 채택하여 그 개념과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위기와 전쟁의 억제를 중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법률 등 각 영역의 투쟁과 밀접히 배합된 군사투쟁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며, 주도적으로 위기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며, 주도적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중재하고, 분쟁과 전쟁의 발발을 억지한다. ◦ 자위의 입장을 엄수하고, 신중하게 무력을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전쟁 국면을 통제하고, 전쟁의 위험과 대가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킨다. ◦ 정예화 된 고효율의 위협전력을 건설하고, 융통성 있게 위협 방식을 운용한다. 중국은 언제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견지하며, 자위방어의 핵전략을 견지하고, 어떠한 국가와도 핵 군비경쟁을 진행하지 않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군대의 각종 안보위협 대응능력과 다양화된 군사임무수행 능력의 향상에 진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 군대의 역사적 사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데 착안하고,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며, 해양·우주·전자 공간의 안보 수호능력을 향상시킨다. ◦ 非전쟁 군사행동, 즉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¹²¹⁾을 국가 군사전력 운용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으며,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능력의 건설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 국제 안보협력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군사교류를 전개하고, 군사 상호 신뢰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인민전쟁 전략사상을 견지하고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나 인민에 의한 국방과 군대를 건설하고, 정예로운 상비군과 강력한 예비전력의 상호 결합을 추진하며, 국가의 전쟁 잠재력과 국방력을 증강한다. ◦ 통일되고 효과 높은 국방동원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경제·과학기술·정보·교통 동원을 강화하고, 예비전력 건설의 수준을 제고한다. 인민전쟁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고, 인민대중의 참전과 전선지원(戰線支援)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며, 정보화 조건하 인민전쟁의 전략전술을 발전시킨다. ◦ 국가 건설에 대국면에 복종하고, 민간 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하며, 군정·군민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출처 : 국방정보본부, 『중국국방백서, 2008』, p.6~9.

121) Military Operations Other War(MOOTW)

중국의 대외정책은 지도자 별로 군사정책이 다른 것을 볼 수 는데 특히, 중국군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 11기 3중전인회에서 개혁과 개방이 당의 노선으로 채택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¹²²⁾ 여기에 따른 중국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양에서 질로’의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군사력의 현대화적인 질적 성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화가 요구되는 국방력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무기장비뿐 아니라 조직·편성·제도·인원·교육훈련 및 전략·전술의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무기장비는 1950년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무기를 바탕으로 자력갱생의 방침에 따라 국산화하여 충족하여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외화획득을 위한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증가시켜 국방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핵전력 분야에서도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 동부해안까지 도달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고, 1982년 이후 두 차례의 수중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실험 역시 성공함으로써 중국이 목표한 ‘최소한의 핵 억지전략’의 기본은 일단 완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²³⁾ 중국군의 향후 무기장비 현대화의 추세로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사이에서의 중점은 지금까지 가격이 저렴하며, 정치적 효과를 포함한 투자효율성이 높은 핵전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강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의 현대화 전력을 더욱 강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화된 중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군사정책과 전략 노선은 마오쩌둥에서부터 장쩌민 시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변화 되었다. 오랫동안 중국의 군사전략으로 30여 년간 이어져 오던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전략은 덩샤오핑에 의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졌다.¹²⁴⁾

122)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부산 : 신지서원, 2004), p.115.

123) ICBM : Inter 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SLBM :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을 의미한다. 공군본부, 『항공우주무기총람』, (2008)

124) 마크 블레처, 『반조류의 중국』, 전병근, 정환우 역, 『현대중국, 그 저항과 모색의 역사』, (서울 : 돌베개, 2001), p.149.

그 이유는 마오쩌둥의 군사전략은 중국의 혁명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덩샤오핑은 무기와 장비의 발전에 따라 전투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현대적 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인민전쟁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시켰다.¹²⁵⁾ 그 이후 덩샤오핑의 전략은 장쩌민에 의해서 현재의 ‘첨단기술 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 전략’ 개념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것을 <표-12> 에서 중국의 지도자별 군사전략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표-12〉 중국의 지도자별 군사전략

지도자	주요전략	내 용
마오쩌둥	인민전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6년 12월 ‘중국 혁명전쟁의 전략문제’에서 이론 정립 ◦ 유적심입, 적극방어(誘敵深入, 積極防禦, 적을 내륙으로 깊숙이 유인해 섬멸) ◦ 혁명화 노선(정신이 물질보다 우월)
덩샤오핑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6월 제11기 6중 전회 ‘건국 이래 당의 몇 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전략 비판 ◦ 인민전쟁 전략 중 ‘유적심입’ 삭제, 영토 밖 전쟁 삽입
	현대적 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국지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6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군사교리의 전환 시도 ◦ 인민전쟁 전략을 폐기하되 적극방어 개념 보완 ◦ 세계대전보다는 제한 국지전 대비
장쩌민	첨단기술 조건하의 제한 국부전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걸프전 충격, 1995~1997년 인민해방군보 에서 걸프전 교훈 집중 보도 ◦ 1997년 1월 장쩌민, 중앙군사위에 기존 군사전략의 전환 지시 ◦ 2002년 11월 제16대 정치보고에서 명문화

출처 : 《동아일보와 전망》, 2002년 11월 11일

125) 김영화, 『강택민과 중국정치』, (서울 : 문원, 1997), p.334.

또한 과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정책은 1960년~1970년대에 걸쳐 주적이었던 소련의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대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의 기본으로 삼아 왔다. 즉, 대 소련 군사력 열세를 미국 및 일본의 대 동북아시아 전략적 이해와 연계시켜 이들과 대 소련 포위의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집권 이후 대미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면서 중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및 군사전략은 과거의 대미 의존적 성격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1980년대 중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은 미국과 소련에 등거리 외교정책을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틀 속에서 형성되었다.

중국의 군사전략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긴장해소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도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혁개방 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일치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첫째, 지역갈등 요인의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 내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증진에 노력하여 왔다. 둘째, 동북아시아에서 지역강국으로써의 지위 확보문제 역시 중국의 주요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성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소련세력의 일탈 현상은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시아에서의 강국으로의 발전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또한 중국의 동북아시아 정책목표의 하나로 간주된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최대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특수한 이념적 개념에서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지역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왔다. 중국은 한·중 수교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독립과 자주적 대외정책을 한반도에서도 실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도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분야의 요인들에 기인한 중국의 군사전략 중 특히 동북아시아 군사정책은 중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시작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은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안정의 도모이다. 둘째, 지역 내 강대국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패권주의의 확산 방지이다. 넷째,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분쟁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¹²⁶⁾

2. 중국의 대 북한 군사협력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협력은 중국의 국제환경 인식, 중국의 국내정세, 중·소 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향한 중국의 목표에 따라 몇 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중·미와 중·북의 정치적 관계 변화와 중·소 양국 간의 정치적 관여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¹²⁷⁾ 1945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기간은 중·소가 동맹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냉전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또한 소련과 중국 모두 국제혁명의 지원차원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에 소련의 군사지원은 북한군의 창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소련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대량의 군사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였으며, 한국전쟁에는 중국이 직접 참전함으로써 중국과의 군사관계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소련의 군사지원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는 스탈린의 세계혁명 세력과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기 위한 권력기반 강화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련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형성된 북한군은 군사 전략, 무기체계 등에서 모두 소련식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으로 이후 소련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보인 소련과 북한간의 군사적 연계는 후루시초프의 등장 이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여, 소련의 지원이 감소되고 중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58년 이후 소련은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서방에 접근하였고, 쿠바의 미사일 위기 시에는 미국에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배격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탈소련 노선을 견지하도록 하였으며, 중·인 국경분쟁과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중·소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북한과 중국관계는 특히 1963년 유소기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크게 발전되었으며 군사적인 연대도 강화되었다. 1958년~1964년의 기간 동안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거의 중단되었던 군사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의 군사지원을 이끌어내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제 3세계에 대한 혁명 수출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군이 철수하는 것을 보상하는 형태의 대량의 군사장비와 무기체계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북한은 이 기간에 소련식의 군사전략에 중국 마오쩌둥의 게릴라

126) 국방부, 『국방저널』, 통권 제311호(1999), p.17.

127) 안상규, 「중국과 북한의 군사협력관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전술을 수용하는 등 군사 전략상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군사지원능력을 고려 시 중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을 계속 모색하였다. 이는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하루 차이를 통해서 연이어 체결된 것으로도 알 수 가 있다. 1964년 10월 후루시초프가 실각하게 되고 1965년부터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북·소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도 중국에서의 문화혁명이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점차 중국에서 다시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북·소 관계 개선의 결정적인 계기는 1965년 2월 이루어진 코시킨 소련수상의 평양 방문 이었다. 이를 계기로 1965년 5월 소련의 대독일전승 20주년 기념행사에 답방 형식의 북한의 군사대표단이 참석하여 북·소간의 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1972년에 이르는 동안에 소련의 북한에 대한 활발한 군사지원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이 기간에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을 통해 현재의 북한군사력의 골간을 완성할 수 있었다. 1972년부터 1983년까지의 중·소의 군사지원은 모두 현상유지 차원이었다. 이 시기 초반동안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은 대폭 감소되며, 상대적으로 중국의 군사지원은 증가하였다. 1972년의 경우 중·소의 대북한 군사지원은 소련이 3배정도 앞섰으나 1973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에 역전되었다. 1973년~1980년 기간 동안을 살펴보면 중국이 더 많은 군사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¹²⁸⁾ 1975년 4월 김일성의 방중이후 1979년부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증대되었고 1982년 9월의 김일성 방중을 계기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억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와 군사지원을 받았다. 1973년부터 1983년까지 보여 지는 중·소의 군사지원 감소는 북한과 중·소간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1960년대의 군사지원으로 한국보다 우세한 전력을 형성하면서 군사력 전반에서의 골격을 완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68년 1월 김신조가 이끄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도발과 푸에블로호 나포, 미 정찰기 격추 등 각종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1970년대 당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분위기를 주도하던 소련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깊은 우려를 보이자, 1982년에 들어서부터 북한은 소련보다는 중국 쪽으로 다시 기울며 친중 노선을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요인은 중국의 대북한 군사지원의 강화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F-16 전투기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의 군사원조 행동으로

128)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1945~1982』, (서울: 북한연구소, 1986), p.1149.

MIG-21 전투기를 중국식으로 개량한 F-6 전투기 20대를 북한에 지원했는데¹²⁹⁾ 이는 지금까지 원유, AN-2 수송기 및 T-62탱크와 같은 중요 군수물자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제공하던 중국의 태도에 비한다면 상당히 과격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83년에 또다시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MIG-21 전투기를 지원받았으며¹³⁰⁾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함경북도 청진항의 사용권과 백두산 천지의 1/3지역을 중국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9년 이후 북한은 정치적으로 중국에 편향된 자세를 일관하면서 수뇌급 인사의 교환을 통한 정치적 결속 강화를 기반으로 긴밀한 연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쌍방관계의 견고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1~2회의 양국 군사대표단의 교류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1987년 8월 오극렬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군사대표단의 북경방문과 이듬해인 4월 중국군 군사친선 참관단이 평양 답방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입장 전달과 대 소련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상호 입장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북·중 관계는 중·소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인 1989년 4월 자오쯔양 총서기가 북한을 전격 방문하는 것에서 재확인 되었다. 또한 1989년 6월 4일 발생한 톈안먼 사태를 반혁명 폭동으로 규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무력 진압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한 이후부터는 더욱 공고화 되었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을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적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1990년 들어서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간접비난의 양면성을 드러냈다.

현재는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여 서로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단계까지 악화된 반면 북한과 중국은 보다 더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상호이념 및 체제의 일체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제반 정책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결국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지속적인 양국군의 수뇌급 인물과 대표단의 정례적인 상호방문을 통해 북·중 군사동맹관계는 전통적인 상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소련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 한 양국관계는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이념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긴밀한 전략적 군사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

129) 《내외통신》, 제356호(1983년 11월 1일 : SIPRI Yearbook 1983), p.320.

130) 《1983년도 외무부 집무자료》, (1984년 1월), p.24.

제3절 북·중 동맹관계의 지속 요인 평가

1. 지정학적 중요성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순치(脣齒)’관계였다. 중국의 서한(西漢) 시기부터 중국과 한반도는 밀접한 정치·경제·문화적 교류를 하였다. 중국의 당(唐)나라 때에도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삼국 통일 즉, 한반도를 통일했다. 16세기 말에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도 명(明)나라는 조선을 도와 일본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17세기 러시아가 중국을 침략했을 때에도 조선은 두 차례 출병하여 청(淸)나라를 원조하였다. 조선과 명·청은 중국과 조선의 안정과 동북 변경의 안전을 유지했다. 근대에 들어가면서 청나라가 몰락하고, 이어서 조선도 침략을 당했다.¹³¹⁾

냉전기에 중국과 북한은 소련과 같이 미국의 확장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했다. 탈냉전기에 중·미·러 삼국은 더 이상 냉전기에 상호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고, 남·북한도 여러 측면의 교류를 통해서 접촉하고 양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전반적 정세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대해 특수한 전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적 안보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는 중·미·러·일 등 강대국의 이익의 교차점에 있고 중국과 여타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 요인이 있다.

근대 시기에 북한은 중국이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에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북한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있으며, 같은 영향을 오래전부터 받은 나라들이고, 비슷한 윤리와 도덕적 관념을 소유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새로운 국제정세의 국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일 간의 점차 강화되는 안보 협력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 쿠웨이트와 이라크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새로운 군사개입주의와 유엔의 제재력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동시에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 왔다. 그 결과 전통적인 양국 간 전략적 특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

131) 場招全, 『中朝關係史論文集』, (世界知識出版社, 1988), p.4~99.

다. 21세기 초반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노선은 상대적으로 북·중 간의 지정학적 이익을 더욱 강화해 주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중국을 잠재적인 도전국가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였으며, 북한을 가리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¹³²⁾ 핵문제 검토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타이완 해협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몽골에 이르는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북한의 안정과 체제유지는 중국의 안보에 대해 훨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정세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한국과는 경제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은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정학적 분석은 더 큰 맥락에서 3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첫째, 국내적 안정과 합리성을 통한 경제발전이며, 둘째는 주변지역 환경의 안정이고 셋째는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제적 위상의 확립이다. 중국의 입장은 이러한 반면 북한의 최대 목표는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의 20% 이상의 식량과 50% 이상의 연료가 외부로부터의 원조이며 냉전 종식으로 소련의 붕괴와 중·소의 대립약화로 인한 순치관계가 없어짐으로써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¹³³⁾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어짐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에 대하여 1990년대와는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북한 역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09년 12월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전 일본총리 고이즈미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가진 회담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처럼 될까봐 두렵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비밀 문서가 해제하면서 공개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전략은 1990년대 북한의 생존을 확보하고 유지시켜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32) 이철현, “미국의 악의 축 정책과 한반도 정세”, 『사회과학논총』, 제18집, 8호, 2002, p.134~151.

133) 리 사, 앞의 논문, p.60.

2.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중 양국은 지정학적 위치, 역사, 경제, 문화 등의 면에서 수많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 북한에게 있어서 유일한 군사동맹국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북한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을 때 진정으로 도움을 주었던 나라는 중국뿐이었다. 북한은 현재까지 자국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이 여전히 중요하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알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인하여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고, 북·일 관계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해 일본 해상과 열도를 넘기는 미사일 발사시 선제공격(미사일 격추)론 주장 등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06년 7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서방의 유럽연합과 유엔안보리까지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의 국제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수교 이후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북·중 관계는 양국 최고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이 중단 된지 8년만인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였고, 2001년 1월과 9월, 2004년 4월과 2006년 1월 4차례에 걸친 북·중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04년 4월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에는 북·중간의 경제관계가 단순한 교류차원을 넘어 제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2004년 북한의 전체 교역량 28억 달러 중 대 중국 교역액이 14억 달러에 달하며,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중국과의 교역이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를 차지하였다. 2005년에는 북·중 교역 규모가 1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가하였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식량의 약 3/1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활동은 북한의 식량난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 확보문제인데, 중국의 단동-삭주 구간에 연결된 송유관 파이프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가 북한이 도입하고 있는 원유의 거의 전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도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2004년 4월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최고 지도자 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4년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5천만 달러에 달하여 2003년도의 1백만 달러에 비해 무려 50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중 사이에 나진항 개발 및 사용권과 무산철광 개발권, 해저원유 공동개발 협정 등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은 경제지원을 제공하여 북한의 체제 붕괴를 막아주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자원개발권과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고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경제의 일체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¹³⁴⁾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과 경제난이 중국경제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문제에 의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전까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나타난 북·중 동맹관계의 복원화 추세는 양국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이라는 전략적 현실을 고려한 정책의 측면이 있는 것이다.

3. 중국의 ‘책임대국’ 전략의 필요

북·중 동맹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다. 오히려 미사일과 핵문제에 의해 악화시킬 요인만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의 북·중 동맹관계는 중국의 영향력의 주도하에 소원과 복원을 통해 유지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요인을 토대로 앞으로 중국의 전략적 외교정책 변화를 주목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대국’(責任的大國)과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책임대국 외교’, ‘다자간 지역주의 외교’, ‘양자 외교로서 주변국과의 선린외교’, ‘다극화 외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연성권력(軟權力)에 기초한 글로벌 대국외교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2003년 전부터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 부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부상’ 한다는 ‘평화굴기론(和平崛起論)’을 제창한 점이 주목된다.¹³⁵⁾ 중국의 평화적 부상

134) 리 사, 앞의 논문, p.61~62.

135) 정배젠, 이희욱 역, 『중국 평화부상의 새로운 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이 ‘중국 위협론’이 아니라 반대로 ‘중국 기회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아예 ‘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평화발전의 노선(和平發展道路)’을 주장했다. 이어 2005년에는 ‘조화로운 세계(和協世界)’란 새로운 외교 이념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평화¹³⁶⁾추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전해 왔다. 실제로 중국의 대국책임외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한의 대응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시켜 그 특징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국책임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신지도부는 집권하자마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제기한바 있다. 즉, 기존의 독립자주 평화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제16차 전당대회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우의와 친선도모와 주변 국가를 동반자로 삼는다.’는 원칙을 제기했고, 장쩌민에 이어서 원자바오 총리는 이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웃을 안정시키고, 이웃을 부유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화목하고 안정적이며 공동 번영하겠다는 발전적 외교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후진타오 체제의 신외교정책은 결국 공세적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와 대립되는 ‘중국의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일종의 선리외교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¹³⁷⁾ 둘째, 후진타오 정권은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병행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다주주의, 다극화, 양자외교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연성권력을 결합하고 병행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¹³⁸⁾ 이러한 외교 노선을 채택한 후진타오 정권에서 중국의 대북 기본정책목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와 ‘한반도 남·북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는 중국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대북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체제의 존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2003년 이후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위기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자, 1월 10일 장쩌민 국가주석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접촉을 통해서 중국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반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주장했고, 이어서 1월 16일 후진타오 당시 총서기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단순한 회

136) 리 사, 앞의 논문, p.62.

137) 김재관, 앞의 논문, p.292~293.

138) 김재관, 앞의 논문, p.293.

망사항이 아니라 요구사항으로 강력히 제기했다.¹³⁹⁾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둘째 ‘남·북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셋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정리 할 수 있다. 후진타오 정권은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즉, 한반도의 돌변사태를 원하지 않는 현재의 안정 상태의 유지를 추구한다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¹⁴⁰⁾



139) 《인민일보》, 2003년 1월 10일

140) 이희옥, 앞의 논문, 2006, p.82.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전망

중국과 북한의 군부관계는 과거 혈맹의 전통이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군부는 북한을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와 안보적 완충지대론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즉, 중국의 동북지역 안정 및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견제하는 전통적 안보관에 따라 북·중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원조와 지속적인 군사적, 정치적 교류를 유지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¹⁴¹⁾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중 양국은 비교적 우호적인 정치적 측면의 고위층 상호방문과 군사적 측면의 군수뇌급 상호방문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국제정세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북·중 양국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양국은 여전히 발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월 18일 중국 국가 부주석인 시진핑(習進平)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 원칙을 다시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연설문에서 ‘피로써 형성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¹⁴²⁾ 김정일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의 장쩌민, 후진타오 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도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세계의 국가 중 최고 지도자의 상호방문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이것은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해 왔다. 북한이 두 차례의 핵위기 국면 시에 중국과 북한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과 중국의 중재를 통해 6자회담의 진행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에 공동의 인식을 가졌다. 이처럼 중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의 지도층이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과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교환했다.¹⁴³⁾

특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부터 6년간 중국을 네 차례나 방문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관계의 신뢰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동맹관계를 지속유

141) 리 사, 앞의 논문, p.65.

142) 朝鮮房門黨總書記會見, 中國駐朝鮮大使館, <http://china-embassy.org/chn/zt/xjpfangchao/t448751.htm>,

143) 김재관, 앞의 논문, p.290~298.

지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또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1961년에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동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북·남·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이 무조건 북한을 원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의 규정상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중 동맹조의 자동개입조항에 관한 재협상 논의가 2003년에 제기되었지만 북한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동맹조약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¹⁴⁴⁾ 또한 김정일 정권기에 들어서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군사동맹관계를 결성 당시의 성격으로 복원하고 지속유지 하고자 한다. 탈냉전시대 북·중 군사동맹관계의 환경은 냉전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21세기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현존하는 유일한 우방국임과 동시에 동맹국인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가 김일성시대보다 중국식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중국 방식을 자연스럽게 흡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김정일은 중국식 경험의 수용에서도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양국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혈맹적 군사동맹관계를 강조하는 시대는 과거 속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양국은 탈냉전이 바꾸어놓은 실용주의적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에 조류를 타면서 서로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국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한국과의 경쟁 속에서 북·중 군사동맹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적 관점에서 북·중 군사동맹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양국의 정치적·군사적 동맹관계가 실용주의적 흐름에 휩쓸려 그대로 해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국관계는 이제 중국을 체제 생존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기는 북한의 이해와 ‘사회주의 북한’의 붕괴를 저지하여 미국을 견제해야 해야 하는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과거 정치적 군사동맹관계에서 새로운 전략적 군사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 간에 여전히 결코 과

144) 이종석, 앞의 논문, p.319.

소평가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인 실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 한·미·일과의 갈등과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종용하는 미국의 압력이 심화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서 중국의 절실한 지원이 필요함을 이미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접근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잠재적 초강대국인 중국이라는 쌍방구도 아래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여 갈 것이며, 이는 당면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혈맹’이라고는 하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위기 발생 시에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 보다는 기본적인 북한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¹⁴⁵⁾ 이러한 맥락의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북·중 군사동맹관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주요골간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깨지면 1,200km에 달하는 중국 동북지역 대륙의 국경과 해상국경 전선에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이 멈추게 되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빈부격차, 지역 및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 실업·민족문제 등으로 인한 모순과 불만이 건잡을 수 없게 표출되어 중국이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질 것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간의 위기고조 사태에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이유에서다. 중국은 북한의 위기가 고조되면 자국도 직접적인 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후진타오 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도 재조정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과 북측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즉, 한반도의 급변사태를 피하는 현 상태의 유지정책을 추구한다는 데에 힘을 기울여 왔다.¹⁴⁶⁾ 중국과 북한은 직면한 북한 체제의 생

145)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2006년 10월 10일 외교부대변인 류젠차오 기자간담회 답변”, <http://www.fmprc.gov.cn/chn/>

146) 김재관,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2007, p.298.

존과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그 이익에 공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양국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나타났었지만, 그것이 북·중 동맹관계의 공동이익을 훼손할 만큼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여러 가지 요인과 결과를 토대로 북·중 동맹관계가 단기적인 갈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사활적 핵심요소인 경제발전과 대만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과 안정적 관계 유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대북외교에서 북한체제의 안정과 존립 그리고 친(親)중국적 관계 유지가 훨씬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현상유지가 중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할 경우 북한을 통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대미 견제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에만 찬성함으로써 실제로 북한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중 간 '동반 성장론'과 '중국 기회론'의 확산으로 북·중 동맹조약의 파기 내지는 수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약의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자동개입 조항의 존폐 여부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중 관계의 변화 여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¹⁴⁷⁾

따라서 이상의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북한의 핵위기 이후 북·중 동맹관계는 부분적인 갈등의 소지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의 핵실험 자체도 북·중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특히, 군사적인 측면의 향후 북·중 군사동맹관계는 북한보다는 중국의 전략적 주도하에 변화하게 될 것이며, 표면적으로는 혈맹전통의 본질을 계승한다는 형태의 군사동맹을 유지하여 나갈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체결된 동맹 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무조건 이행하는 군사동맹보다는 국익을 고려한 친선우호관계 차원의 교류와 공식적인 전략적 군사협력관계로 점차 변화하면서 군사동맹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147) 김재관, 앞의 논문, p.318.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논문

김재관,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제52집, 2007)

김한규, “한중관계사2”, (대우학술총서논저, 2006년)

김태운, “냉전기 북한의 대중·소 동맹·협력외교에 관한 연구”,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5)

김 덕, “북한의 대중·소 관계 전개”, 『북한연구소편』, (북한외교론 북한연구소, 1978)

김일수,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정책과학연구원』, 제26집 2호, 2006

리 사, “한중 수교이후 북-중 관계,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진형,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 실태와 전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박치정, “중국-북한 관계변화의 양상”, 중국연구 제 23권,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4)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 동맹관계 :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연례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2007. 12)

박창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중 관계의 변화”, (사회과학론집), 제37집, 2호, 2006)

신상진, “북·중 관계 전망 : 미·북 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상근,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이종석, “북·중관계의 현황과 추이”, 세종연구소. 2001

안성수, “북한의 대중국 동맹관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7)

이희옥, “체제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모색”, (국제정치론집, 제45집 1호, 2005)

이원봉·이시형,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정치정보연구 제7집, 1호, 2004).

이철현, “미국의 악의 축 정책과 한반도 정세”, (사회과학논총 제18집, 8호, 2002)

오수열, “북·중 관계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동북아평화번영과 재외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한국동북아학회, 호남국제정치학회, 합동국제학술회의(2003. 12. 18~19) 발표논문

안상규, “중국과 북한의 군사협력관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안성수, “북한의 대중국 동맹관리 비대칭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전병곤, “중국의 북핵 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 (중국학 연구 제 35집, 2006)

- 정지위, “북방 3각 관계-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 연구소 : 1978)
- 조용진, “북한의 대중·소 동맹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조승순, “중·소 분쟁과 북한”, (아세아연구 제30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 조용진,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북한 동맹정책”, (국제문제논총 제 7권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995)
- 최영일, “북-중 동맹관계와 군사협력관계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 _____, “6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 허문영,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통합연구 제18집, 1호, 2005)
- _____, “북한의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편,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2003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세와 정책 통권81호, 경기성남 : 세종연구소)

나. 학술지

김유남, 『두 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학영사 1999)

김일성, 『우리의 정의의 공동 투쟁은 승리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
참전 2주년에 제하여』, 『근로자』 1952 10호

_____,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1952. 4. 25)”,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0)

_____, 『김일성 선집 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김재철, 『북한-중국간 외교관계』, 윤전석 편, 『통일환경론』 (서울 : 오
름, 1996)

김영화, 『강택민과 중국정치』, (서울 : 문원, 1997)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 백산서당, 2002)

김우상, 『신한국 책략』, (서울 : 나남출판, 1999)

김재철, 『북-중간 외교관계』, 『통일 환경론』, (서울 : 오름, 1996)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상순, 『북한 오십년사』, (서울 : 지문각, 1961)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서울 : 화평사, 1991)

공군본부, 『ICBM : Inter 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SLBM :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을 의미한다.』, (공군본부 : 항공우
주무기총람, 1999)

국방부, 『국방백서』 (2000)

_____, 『대외정치검색 목록, 북·중 군사대표단의 상호방문 현황』 (1980-2008)

국방정보본부, 『중국국방백서, 2008』

마크 블레처, 『반조류의 중국』, 전병근, 정환우 역 『현대중국, 그 저항과 모색의 역사』, (서울 : 돌베개, 2001)

『북한 사회주의 헌법』, (1998. 9. 5 개정), 제9조

_____, (1998. 9. 5 개정) 제60조.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서울 : 동아출판사, 1994)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1945~1982』, (서울: 북한연구소, 1986)

『1983년도 외무부 집무자료』, (1984년 1월)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 폴리테이아, 2006)

송영우, 『현대외교론』, (서울 : 평민사, 1998)

신상진, 『중국 신지도부의 대내외 정책전망 보고서』,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시모토마이 노부오, 이혁재 역,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서울 : 기파랑, 2006)

송영우, 『현대외교론』, (서울 : 평민사, 1998)

정삐젠, 이희옥 역, 『중국 평화부상의 새로운 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안인해, 『북한 핵실험 이후 : 중국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2006 한국국제정치학위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6년 12월 1일

이기택, 『국제정치사』, (서울 : 일신사, 2000)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2000)
- 이완번,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 박두복(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 오진용, 『갈림길에 선 중국·북한관계』, 『북한』 제327호(1999)
-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부산 : 신지서원, 2004)
- 유동렬, 『98년 북한 김정일 체제의 전망』, 『월간 북한』. 통권 315호 (1998)
- 유석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 (서울 : 박영사, 1997)
-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서울 : 박영사, 2002)
- 통일원, 『95 북한개요』
 _____, 『주간 북한동향』, (1992. 10. 11~17)

2. 외국문헌

가. 단행본

- 『中國人民志願軍人物志』, (南京 : 江蘇人民出版社, 1997)
- 楊昭全, 韓俊光, 『中朝關係簡史』, (瀋陽 : 遼寧民族出版社, 1992)
- _____, 『中朝關係史論文集』, (北京 : 世界知識出版社, 1988)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政策研究室, 『中國外交, 1997』 (北京 : 世界化知識出版社, 1997), 『1996년도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주요조약·협정 일람표』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 Spring 2003.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Summer 1997)조선일보」, 1997. 4. 14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 Hall, 1983),

Stephen M. Walt, The of Alliance,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 Peninsula :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2003, Vol.26, No.2

3. 기 타

가. 신문, 일간지, 인터넷

《臺灣聯合報》, (2004. 8. 31)

《人民日報》, 1954년 6월 25일

_____ , 2009년 9월 8일

《연합뉴스》, 2003년 2월 13일

《내외통신》, 제356호 (1983년 11월 1일 : SIPRI Yearbook 1983)

_____ , 제356호, 1983년 11월 4일

《동아일보》, 2002년 11월 11일

_____ , 1995년 6월 15일

《文匯報》, 1992년 8월 25일

《로동신문》, 1954년 6월 17일

_____ , 1954년 5월 24일

_____ , 1954년 6월 25일

《중앙일보》, 백승주, 「오피니언」 2009년 6월 5일

《로동신문》, 《근로자》, 1999년 6월 1일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인민일보》, 2001년 3월 22일

《인민일보》, 2003년 1월 10일

KOTRA <http://www.korea.or.kr/main/trade/nk/letter/select.jsp>), 중
국해관전산통계(1998~2001)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ain/top.html>)

<http://www.people.com/GB/shizheng/1026/2900122.html>

<http://prenew.britannica.co.kr/spotlights/nkorea/politics/b15a3356.html>

<http://www.nkchosun.com/glossary/glossary.html>

<http://100.naver.com/100.nhn?docid=1993>

朝鮮房門黨總書記會見, 中國駐朝鮮大使館, [ttp://china-embassy.org/chn/zt/xjpfangchao/t448751.htm](http://china-embassy.org/chn/zt/xjpfangchao/t448751.htm),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2006년 10월 10일 외교부대변인 류젠차오 기자간담회 답변”, <http://www.fmprc.gov.cn/chn/>

中國共產黨歷次全國大表大會, <http://cpc.people.com.cn/>